

2019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페미니즘,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넘어서다

일시 | 2019년 11월 16일(토) 9:30-18:40

장소 | 중앙대학교 R&D 센터 (102관)

307호, 308호, 309호, 314호

주최 : 한국여성학회

주관 : 한국여성학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

PLUS 사업팀, 중앙사회학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9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

일 정 표

시 간	순 서			
09:30-09:50	등록 및 접수			
09:50-10:00	개회사 및 축사 (R&D 센터 314호 대강당)			
10:00-11:30	기조강연 (R&D 센터 314호 대강당)			
11:30-12:30	점심식 및 이사회 (R&D 센터 11층 University Club)			
12:30-13:30	정기총회 (R&D 센터 314호 대강당)			
13:30-15:10	[기획세션] 성정치와 민주주의 (R&D 센터 307호)	[기획세션(라운드테이블)] 페미니스트 정당정치의 안과 밖 (R&D 센터 314호 대강당)	[자유세션] '성폭력'의 재구성과 섹슈얼리티 정치 (R&D 센터 308호)	
15:10-15:20	휴식			
15:20-17:00	[기획세션] 젠더화된 법, 법을 집행하는 여성들 (R&D 센터 307호)	[기획세션] 일터민주주의, 여성의 이해대변과 의사결정 참여 (R&D 센터 308호)	[기획세션] 돌봄과 친밀성의 새로운 지평 (R&D 센터 309호)	[자유세션] 페미니즘 시대의 페미니즘, 격동하는 젠더 관계 (R&D 센터 314호 대강당)
17:00-17:10	휴식			

17:10-18:40	[기획세션] 디지털 정치 공간에서의 젠더 정의 (R&D 센터 307호)	[기획세션] # 미투 이후, 광장 민주주의와 젠더정책 로드맵 (R&D 센터 314호 대강당)	[자유세션] 전환기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R&D 센터 308호)	[자유세션] 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R&D 센터 309호)
-------------	---	---	--	--

2019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페미니즘,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넘어서다

09:30-09:50 등록 및 접수

09:50-10:00 개회사 신경아(한국여성학회장)

축사 류중석(중앙대 교학부총장)

기조강연

(R&D 센터 314호 대강당)

10:00-11:30

사회: 배은경(서울대)

1_페미니즘과 민주주의

발표: 김현미(연세대)

2_대학, 페미니즘, 민주주의

발표: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11:30-12:30 점심식사/이사회

12:30-13:30 정기총회

[기획세션]

성정치와 민주주의

(R&D 센터 307호)

13:30-15:10

사회: 안숙영(계명대)

1_동수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 탈육화된(disembodied) 권력 비판과 탈성화(unsexing) 전략의 패러독스

발표: 이진옥(이화여대)

2_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발표: 김희강(고려대)

3_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 가족돌봄 차별금지 도입을 위한 시론

발표: 김영미(연세대)

토론: 조은주(명지대)

송다영(인천대)

황정미(서울대)

[기획세션(라운드테이블)]

페미니스트 정당정치와 안과 밖

(R&D 센터 314호 대강당)

13:30-15:10

사회: 차인순(국회사무처 여성가족위원회)

1_여성당원 50%시대? 실질적 성평등 어디까지 왔는가

발표: 홍미영(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2_대중성과 진보, 공존할 수 있을까?-원내진보정당이라는 딜레마-

발표: 활동가 강총(정의당 여성정책연구모임 노란페미)

3_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할까?

발표: 고은영(녹색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

4_미투 이후의 정치, 구체적 경로를 만드는 일

발표: 이보라(국회 여성정책연구회/보좌관)

5_현실정치와 거리두기와 개입,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

발표: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자유세션]

‘성폭력’의 재구성과 섹슈얼리티 정치

(R&D 센터 308호)

13:30-15:10

사회: 신상숙(서울대)

1_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 참여자들의 분노와 여성 정체성

발표: 고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_세계성으로서 섹슈얼리티: 안희정 사건의 썬진함

발표: 오정진(부산대)

토론: 김소라(숭실대)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15:10-15:20 휴식

[기획세션]

젠더화된 법, 법을 집행하는 여성들

(R&D 센터 307호)

15:20-17:00

사회: 홍진영(서울대)

1_성폭력 ‘가해자/들’의 법적 대응과 ‘가해자 카르텔’의 확장

발표: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2_경찰의 성별 직무 분리와 성폭력 사건처리의 한계

발표: 이비현(서울지방경찰청)

3_‘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의미와 영향

발표: 김선화(수원지방법원)

토론: 추자현(서울대)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세션]

일터민주주의, 여성의 이해대변과 의사결정 참여 (R&D 센터 308호)

15:20-17:00

사회: 이주희(이화여대)

1_노동조합의 성평등 실태와 과제

발표: 윤정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_여성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다양한 교섭구조, 잘 작동하는가

발표: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토론: 김금숙(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기획세션]

돌봄과 친밀성의 새로운 지평

(R&D 센터 309호)

15:20-17:00

사회: 송다영(인천대)

1_교차적 관점에서의 시설화 비판, 탈시설운동 전망 찾기

발표: 조미경(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2_관계적 친밀성, 관계적 '생존': '사회적인 삶'과 '가족'을 질문하며

발표: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3_친밀함의 공공성 모델을 찾아서: 아동 돌봄 공공성 국제비교와 덴마크 사례

발표: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신지영(연세대)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난주(대구대)

[자유세션]

페미니즘 시대의 페미니즘, 격동하는 젠더관계(R&D 센터 314호 대강당)

15:20-17:00

사회: 이현재(서울시립대)

1_지금, 여기의 래디컬 페미니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통한 성찰

발표: 허성원(서울대)

2_‘페미니즘 전성시대’ 속 모순과 위기가 말하는 것

발표: 정운정(경희대)

3_한국사회 친밀성의 변화?: 연애하지 않는 여성 젊은이들

발표: 임국희(서울대)

토론: 엄혜진(경희대)

민가영(서울여대)

김애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7:00-17:10 휴식

[기획세션]

디지털 정치 공간에서의 젠더 정의

(R&D 센터 307호)

17:10-18:40

사회: 김예란(광운대)

1_‘표현의 자유’ 담론과 혐오표현 문제

발표: 김수아(서울대)

2_탈 진실 시대의 페미니스트 발화

발표: 김보명(부산대)

3_BL 소설 세계관 분석을 통한 가상적 섹슈얼리티 생산 가능성 연구: 알파/오메가 섹슈얼리티의 페미니즘적 해석을 중심으로

발표: 장민지(연세대)

토론: 김민정(한국외대)

정승화(연세대)

손희정(연세대)

[기획세션]

#미투 이후, 광장 민주주의와 젠더정책 로드맵 (R&D 센터 314호 대강당)

17:10-18:40

사회: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1_문화예술계 미투운동과 성평등 문화정책

발표: 박소현(서울과기대)

2_‘페미니즘 리부트’와 디지털 성폭력

발표: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3_디커플링(decoupling)과 젠더: 대학 성폭력·인권 문제 제도화의 착종을 중심으로

발표: 유현미(서울대)

토론: 홍기원(숙명여대)

김주희(서강대)

최김하나(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자유세션]

전환기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R&D 센터 308호)

17:10-18:40

사회: 정민승(한국방송통신대)

1_평생학습의 패러다임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페미니즘 학습을 향하여

발표: 김동진(여성주의 교육 연구소 페페(Feminist Pedagogy)/숙명여대)

2_의사결정 게임을 활용한 남학생의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연구

발표: 장혜원(육아정책연구소)

최윤희(송문중/이화여대)

토론: 배유경(서울대)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유세션]

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R&D 센터 309호)

17:10-18:40

사회: 이은아(이화여대)

1_여성들의 경험에 나타난 육아휴직의 다면성

발표: 황정미(서울대)

2_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사례 분석: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3_남성돌봄의 주변화와 역할 전이: 남성육아휴직자 사례분석

발표: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토론: 김수정(동아대)

이순미(전남여성가족재단)

목 차

[기조강연]

-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21
- 대학, 페미니즘, 민주주의 23

[기획세션] 성정치와 민주주의

- 동수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 탈육화된(disembodied) 권력 비판과 탈성화(unsexing) 전략의 패러독스 27
-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29
- 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 가족돌봄 차별금지 도입을 위한 시론 33

[기획세션] 페미니스트 정당정치의 안과 밖(라운드 테이블)

- 여성당원 50%시대? 실질적 성평등 어디까지 왔는가 37
- 대중성과 진보, 공존할 수 있을까?-원내진보정당 이라는 딜레마- 39
-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할까? 41
- 미투 이후의 정치, 구체적 경로를 만드는 일 43
- 현실정치와 거리두기와 개입,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 145

[자유세션] ‘성폭력’의 재구성과 섹슈얼리티 정치

- 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 참여자들의 분노와 여성 정체성 49
- 세계성으로서 섹슈얼리티: 안희정 사건의 썬진함 51

[기획세션] 젠더화된 법, 법을 집행하는 여성들

- 성폭력‘가해자/들’의 법적 대응과 ‘가해자 카르텔’의 확장 53
- 경찰의 성별 직무 분리와 성폭력 사건처리의 한계 55
-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의미와 영향 57

[기획세션] 일터민주주의, 여성의 이해대변과 의사결정 참여

- 노동조합의 성평등 실태와 과제 61
- 여성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다양한 교섭구조, 잘 작동하는가 63

[기획세션] 돌봄과 친밀성의 새로운 지평

- 교차적 관점에서의 시설화 비판, 탈시설운동 전망 찾기 67
- 관계적 친밀성, 관계적 ‘생존’: ‘사회적인 삶’과 ‘가족’을 질문하며 69
- 친밀함의 공공성 모델을 찾아서: 아동 돌봄 공공성 국제비교와 덴마크 사례 · 75

[자유세션] 페미니즘 시대의 페미니즘, 격동하는 젠더관계

- 지금, 여기의 래디컬 페미니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통한 성찰 · 81
- ‘페미니즘 전성시대’ 속 모순과 위기가 말하는 것 83
- 한국사회 친밀성의 변화?: 연애하지 않는 여성 젊은이들 85

[기획세션] 디지털 정치 공간에서의 젠더 정의

- ‘표현의 자유’ 담론과 혐오표현의 문제 91
- 탈 진실 시대의 페미니스트 발화 95
- BL 소설 세계관 분석을 통한 가상적 섹슈얼리티 생산 가능성 연구: 알파/오메가 섹슈얼리티의 페미니즘적 해석을 중심으로 97

[기획세션] #미투 이후, 광장 민주주의와 젠더정책 로드맵

- 문화예술계 미투운동과 성평등 문화정책 105
- ‘페미니즘 리부트’와 디지털 성폭력 107
- 디커플링(decoupling)과 젠더: 대학 성폭력·인권 문제 제더화의 착종을 중심으로 109

[자유세션] 전환기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 평생학습의 패러다임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페미니즘 학습을 향하여 115
- 의사결정 게임을 활용한 남학생의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연구 117

[자유세션] 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 여성들의 경험에 나타난 육아휴직의 다면성 125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사례 분석: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중심으로 129
- 남성돌봄의 주변화와 역할 전이: 남성육아휴직자 사례분석 131

기조강연

사회: 배은경(서울대)

1_페미니즘과 민주주의

강연: 김현미(연세대)

2_대학, 페미니즘, 민주주의

강연: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발표문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김현미(연세대)

발표문

대학, 페미니즘, 민주주의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세션

성정치와 민주주의

사회: 안숙영(계명대)

1_동수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 탈육화된(disembodied) 권력 비판과 탈성화(unsexing) 전략의 패러독스

발표: 이진옥(이화여대)

2_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발표: 김희강(고려대)

3_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 가족돌봄 차별금지 도입을 위한 시론

발표: 김영미(연세대)

토론: 조은주(명지대)

송다영(인천대)

황정미(서울대)

발표문

**탈육화된(disembodied) 권력 비판과 탈성화(unsexing) 전략의
패러독스:
동수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의 긴장¹⁾**

이진옥(이화여대)²⁾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집행하는 헌법기관은 여전히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며, 남성 지배의 영역에서 타자로서의 여성에 의해 체현된(embodied) 대표성은 여전히 소수 집단에 불과한 여성들을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징표화 문제에 직면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탄생과 몰락은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결핍이 어떻게 여성의 육화된 재현에 응집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폭로하였으며, 역설적으로 남성지배는 탈육화된 권력을 방증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은 촛불광장에서 결집하여 상징적 여성 대표성의 실패에 대한 방어선을 세우고자 하였다.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여성 대표성은 대의 민주주의의 치명적 모순과 한계를 집결시키는 양가적이고 모순적 장소이나, 여성 대표성은 페미니스트 정치의 주요한 출발점이자 좌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 페미니스트 진영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충동과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 정치 담론은 여성 대표성의 문제를 삭제시킴으로써 다시 대의 민주주의가 남성화된 정치의 과정으로 남겨두는데 기여하는 담론적 효과를 낳는다.

이 글은 ‘페미니즘이 정치’라는 주장과 정치가 배타적으로 남성에게 제한되어있는 사실 사이의 명백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전치적인 전략으로서 동수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권력공유에 대한 제도화와 대표성을 둘러싼 담론의 구성적 특징과 상징적 재현의 육화된 의미를 고찰하며, 동수 민주주의가 지닌 이론적 잠재성과 현실 세계의 실천적 함의를 진단한다. 주권을 대표하는 권력은 남성 신체에 의해 독점되었으나 이러한 ‘추상화된’ 남성 권력은 여성 배제의 증충적 효과를 낳았다. 탈육화된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출발하여 권력의 육화된 실체를 폭로하는 한편, 이러한 권력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고안된 프랑스의 동수법(parité)은 여성과 남성의 해부

1) 이 논문은 아래 글들의 발췌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이진옥(2019) “남성지배 해체의 기획, 동수” 『여/성이론』 40호: 10~34, 이진옥·황아란·권수현(2017)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할당제의 효과와 한계”, 『한국여성학』, 제33권 4호: 209~246, 이진옥(2016) “보수 여성 주체에 대한 연구 - 20대 총선 부산여성총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16권 2호: 41~92.

2)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lee.jinock@ewha.ac.kr

학적 이원성을 공화국의 핵심적 기반인 추상적 개인주의에 삽입함으로써, 공화국의 각인된 남성성을 탈각시키고 여성 대표의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스콧 2009: 113~114). 2000년 프랑스의 동수헌법 도입 이후 개헌을 이룬 다수의 국가들은 동수의 원칙을 헌법 조문으로 삽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즉 동수정신이 평등의 핵심적 가치임을 법적으로 승인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촛불혁명으로 동성에 반대에 극우보수 세력이 결집하며 성평등이 종북의 정치적 위상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수는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동수의 가치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남녀동수’가 법으로 기계적으로 번역되며 그러한 담론적 효과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맞서 동수가 젠더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배제적이라는 비판이 페미니스트 담론에서 만연하다. 이 글에서는 “정의는 한 사회를 이루는 모든 (성인)구성원이 서로 대등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프레이저(2017)의 주장을 이어, 법적·정치적 범주로서 여성의 남성과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동수를 정의의 한 축으로 개념화하며, 그를 통해 동수가 분배와 인정을 위한 참여와 대표의 민주성을 확장하는 민주주의의 견인차가 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발표문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김희강(고려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실천적 노력이 치열하게 지속되는 대여정인 이유는 정치사회의 규범으로서 민주주의의 위상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rule by the people)로 정의되지만, 이는 단지 참정권의 획득이나 혹은 선거제도의 확립 이상을 뜻함은 분명하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과 불만을 동일한 조건에서 표출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와 유효한 기회의 실질적 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규범적 이상으로서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를 갖는 ‘정치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Young, 2000).

따라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노력은 정치적 평등을 향한 노력이었으며, 이는 또한 사회의 위계질서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사회의 공고화된 위계질서는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된 장벽이었기 때문이다. 200년 전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는 『여성의 권리 옹호』에서 부, 명예, 권력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는 “갈잡은 기준으로 세운 위계(preposterous distinctions of rank)”에 대해서 비판한다(Wollstonecraft, 1992[1792]: 262). 이러한 위계는 젠더관계뿐만 아니라 귀족제도, 군대 혹은 성직자 조직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의 문제는 태생적 혹은 부여받은 지위(신분)로 인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지위가 이미 결정되고 공고화되어 버린다는 사실에 있다. 위계질서야말로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정의이자 부도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도전하는 것이 평등의 이상이라고 울스톤크래프트는 주장한다. 20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도 울스톤크래프트가 꼬집은 위계질서는 기존의 혹은 새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형·재생산되고 있으며 정치적 평등을 잠식·훼손하고 있다.

이 글은 정치적 평등을 향한 역사의 경로를 추적해보고 그 경로에 맞춰 보다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8-19세기 자유민주주의가 봉건적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면, 19-20세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모두 정치적 평등을 향한 인류의 진일보한 성취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의 성과를 일정 부문 목도하고 있는 21세기 현재 상황에서 우리

는 또 다른 위계질서에 봉착해 있음도 틀림없다. ‘돌봄(care)’이 배제된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스템과 사회민주주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는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는 부정의를 경험한다. “돌봄의 지위(care status)”가 바로 위계질서 속 배제를 가름하는 것이다(Tronto, 2017: 38). 이 글은 돌봄의 지위로 가름되는 위계질서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에 도전하는 돌봄민주주의야말로 기존 민주주의에 비해 더 정의롭고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배제된 사회경제의 위계질서에 도전하고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이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II장은 정치적 평등으로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고(提高)한다. III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적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①정치적 평등을 향한 노력인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 ②‘자유’와 ‘노동’이라는 정치적 평등의 가치, ③자유민과 노동자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정치적 동력, ④시장제도와 복지제도로 대표되는 정치적 평등의 제도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각각 논의한다. IV장은 돌봄민주주의를 역시 정치적 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적용된 앞선 분석 틀을 활용하여 ①돌봄민주주의는 어떤 위계에 도전함으로써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돌봄이 배제된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도전), ②돌봄민주주의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적 평등을 재편하는가? (‘돌봄’이라는 정치적 평등의 가치), ③ 돌봄민주주의의 정치적 동력은 누구이며 누가 시민자격을 부여받는가? (돌봄인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정치적 동력), ④돌봄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가? (함께돌봄책임제도를 통한 정치적 평등의 제도화)라는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며, 돌봄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에 비해 더 정의롭고 더 포용적임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결론의 V장에서는 돌봄민주주의를 향한 현재 노력의 적실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한다.

이 글은 정치적 평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도전과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조망해 보았다. 사회구성원이 평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거치며 현재의 돌봄민주주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봉건적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시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배타적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성립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제도는 계급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였고, 이에 도전한 사회민주주의는 ‘노동’ 중심의 복지제도를 통해 시민으로서 노동자의 지위를 확립하고 이를 매개로 계급협력, 사회적 평등 및 공동체 연대를 설파하였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목도한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위계질서로 인한 정치적 배제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돌봄을 포용하지 않은 현재의

사회경제제도에서 소위 ‘돌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착화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서두의 울스톤크래프트가 비판한 위계질서와 다르지 않다. 이 불평등은 사회의 영역 간 연계되고, 세대 간 지속되며, 젠더·인종·계급에 기초한 여타의 불평등과 교차하여 더욱더 공고화되고 있다.

‘돌봄’은 ‘자유’와 ‘노동’에 버금가는 (보다 엄격히 말하면, 이들에 선행하는) 개인과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가치이자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담당해야 하는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경제제도 속에서 돌봄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은 부당하게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지면 결국 사람들은 돌보는 일을 그만두려고 할 것이다.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폴브레(2007: 77)의 예측은 전대미문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절벽의 암담한 미래를 전망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일면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노동위기를 염려하며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라는 저서에서 “노동의 시민권이 노사관계와 정당체제에서 취약해질 때 그것의 부정적 효과는 사회 전반의 공동체적 결속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노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최장집, 2013: 9). 이는 노동에 가치를 두는 민주주의는 시민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장집의 주장에 동조하는 다른 정치학자 고세훈은 노동권으로 매개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발전이야말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노동 없는’ 민주주의란 그 자체로 모순된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고세훈, 2005: 186).

이 글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최장집과 고세훈의 주장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노동으로 매개될 수 없는 (매개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인 돌봄민주주의에 주목하였다. 돌봄민주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돌봄 시민권의 이해, 돌봄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 돌봄을 매개로 한 연대와 투쟁(돌봄운동), 함께 돌봄책임의 제도화에 혁명에 버금가는 모두의 반성과 쇄신 그리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돌봄민주주의는 더 포용적이며 더 정의로운 민주주의이다. ‘돌봄 없는’ 민주주의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앞으로 민주주의의 시간은 ‘돌봄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사회적·국가적 상처들’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치유하는 투쟁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문

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 도입을 위한 시론

김영미(연세대)

1. 문제제기

젠더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논의한 황정미(2017)는 한국사회에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체계화되고 성평등 제도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일상에서의 젠더 격차가 지속되며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와 여성노동의 주변화는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여전하며 일상생활의 시간 압박이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 또한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성정책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20여년간 있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들의 삶을 누르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등 강고한 기득권 구조에 개입할 만한 정책 수단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황정미, 2017: 46)”고 진단하고 있다.

87년 이후 민주화된 공간에서 성평등 제도개혁이 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터와 일상에서의 젠더 격차가 지속되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문제(김영미, 2016), 가족 구조,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여성운동의 전략과 분화의 문제(김경희, :)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으나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한국사회에 강력한 차별금지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이 다양한 방식으로 행위자들이 젠더 격차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맥락적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금지를 강화할 것인가? 이 질문은 술한 젠더법 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다. 차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전략, 간접차별의 법리를 발전시키는 전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전략, 개별법들에 산재되어 있는 차별금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전략 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어떤 전략들은 정치적 한계에 부딪쳐서, 어떤 전략들은 관료제의 장벽에 부딪쳐서 좌초되거나 무한보류 중이다. 다른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의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¹⁾.

1) 이 제목은 Farrell and Guertin(2007)의 “Old Problem, New Tactic: Making the

강력한 차별금지법 자유주의적 성평등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한국에서도 미국의 차별금지법을 소개하거나 그 함의를 논의하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집중해 있어 차별이 입증되었을 때 고용주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 고용상 성차별 소송들과 판례들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대한 정의와 차별의 입증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더 큰 함의를 준다. 미국의 성차별 소송들에서도 고용 상 성차별의 입증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해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0년대 이후 가족돌봄책임 차별 소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 소송들이 등장하면서 차별 입증 법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유럽에서도 최근 등장한 돌봄제공자 차별(caregiver discrimination)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정착되고 돌봄제공자 차별 소송은 성별이라는 지위에 기반한 차별 소송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은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가 우리나라 차별금지 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차별 법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획세션(라운드테이블)

페미니스트 정당정치의 안과 밖

사회: 차인순(국회사무처 여성가족위원회)

1_여성당원 50% 시대? 실질적 성평등은 어디까지 왔는가

발표: 홍미영(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2_대중성과 진보, 공존할 수 있을까?-원내진보정당 이라는 딜레마-

발표: 활동가 강총(정의당 여성정책연구모임 노란페미)

3_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할까?

발표: 고은영(녹생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

4_미투 이후의 정치, 구체적 경로를 만드는 일

발표: 이보라(국회 여성정책연구회/보좌관)

5_현실정치와 거리두기와 개입, 그 사이에서 방향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

발표: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발표문

여성당원 50%시대? 실질적 성평등은 어디까지 왔는가

홍미영(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1. 들어가는 말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한국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49개국 중 115위이다. 경제순위는 작년 세계은행 기준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성별 불평등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WEF의 성격차지수(GGI)를 좀더 살펴보자.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의 '건강과 생존' 지수는 0.973, '교육적 성취'는 0.960.¹⁾ '경제적 참여와 기회'는 0.533, '정치적 권한'은 0.134를 나타냈다. 한국은 교육과 건강 면에서는 평등한 편이지만 경제와 정치, 특히 정치 영역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영역의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여성 문제의 핵심은 모성 보호나 건강 등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성에 있다. 여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탁월하게 높고, 각종 취업 시험에서 남성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지만,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잡는 것은 몹시 힘들다. 승진해서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성별임금격차는 OECD 가입 이후 줄곧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는 해법은 바로 정치의 영역에 있다. 법적·정책적·제도적 해법을 수립하고 집행해야만 여성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여성 의원 비율은 102위, 여성 각료 비율은 119위 등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니, 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성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며 필요조건일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어떻게 정치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공정사회로의 실현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책과 공부를 통해 얻은 문서화된 자료도 활용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정치인이자 활동가로 오랜 기간 달려온 나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할 것이다. 나는 1980년대부터 지역에서 여성운동과 빈민운동을 실천하면서 지방·중앙정치, 지방행정을 해왔다. 공부는 가끔 했고 실천은 늘 부지런히 한 활동가이다. 운동을 정치로, 정치를 운동처럼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경험이 여성주의적 지식체계 안에서 또다른 지식자료

1) 한국 남성들의 대학 재학 중 군복무 2년을 교육기간으로 계산해 지표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남녀 간 교육에서의 성 격차는 훨씬 더 적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길 바란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하신 대통령의 금년 시정연설의 화두는 ‘공정’이었다.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젠더 영역의 불공정성도 함께 개선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한다.

발표문

대중성과 진보, 공존할 수 있을까 - ‘원내 진보정당’ 이라는 딜레마

활동가 깡총(정의당 여성정책연구모임 ‘노란페미’)

1. 들어가며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평범한 여성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하여 많은 진보진영 조직들은 다양성과 인권 그리고 성 평등을 기조로 삼기 시작했다. 국민승리21부터 진보의 황금기라 불리는 민주노동당을 거쳐 현재의 진보정당들의 성과는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더디지만 확실한 변화들을 곳곳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호명이라는 페미니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열려 있을까

대중성이라는 말은 매력적이다. 특히 일부는 ‘대중성’이란 단어는 확실한 득표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묘한 신뢰감이 있다.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다. 진보정당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갖는 사회 변혁에 대한 무게감을 단순히 다득표와 집권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을까? 집권을 향해 달려야 하는 건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더 다양하고 낮은 곳에 집중하는 정치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이다. 주류정치가 주목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 의회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다.

정의당은 창당 당시 전국의 이천 명의 당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약 오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커진 몸집만큼 목소리 또한 다양해 졌다.

선명함을 잃고 우경화 되어가는 가짜 진보정당, 세상이 나빠지기만을 기다리는 현실감 없는 급진파들이라는 수식어를 동시에 지닌 신기한 정당이자 역대 5번의 지도부 중 여성 당대표가 네 번의 임기를 지낸 당이기도 하다. 여섯 명의 국회의원과 서른 여섯명의 지방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왜 우리는 늘 대중성이라는 단어 앞에 주저하고 ‘표 떨어진다’라는 말에 겁 먹는가. 페미니즘은 왜 대중의 언어가 될 수 없는 건가?

진보정당 활동가이자 여성청년당원으로써 지난 5년간의 정당 활동을 통해 공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진보와 대중성, 두 단어의 공존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발표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할까? “제도와 정당의 정비 후에 우리는 GDP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고은영(녹색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

2016년 4월 총선 이후 조금이라도 녹색당을 돕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강정마을 평화책방’에서 서귀포시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참석한 날, 여남 모임 지기 중 여성지기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제주녹색당 여성 운영위원이 부족해 바로 당연직 운영위원이 됐습니다. 1년 간 운영위원 활동을 하다 2017년 5월 제비뽑기를 통해 여여 운영위원장 중 한 명이 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본선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 제주도지사 후보로 기록되었으나 낙선했습니다. 현재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 불평등의 시대를 마주하며

올 해 4월, 제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7학번 페미니스트와 85년생 정치인이자 활동가가 세월호 캠페인 부스에 앉아 커피를 나눠마셨습니다. 휴대폰으로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결정 생중계를 지켜봤고, 함께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요. 우리는 4일 간 부스를 운영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이는 남편을 만나 가부장제를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주 시골 학교에 다니며, 아침저녁으로 차량으로 픽업합니다. 남편은 교수이고, 한 살림 조합원이며, 박사 논문을 준비하느라 제주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취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요하고 평범한 삶입니다. 저 또한 고요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양이들을 혼자 돌봤고 이주한 곳에서 프리랜서 일을 해서 연세를 냈습니다. 네트워크가 없어 무작정 시장 할머니들 옆에 앉아 하루 종일 인터뷰하고,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에 함께 환호했지만 사실 100% 균일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마다 다른 위치성과 교차 지점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80년대 학번들의 권력 집중, 그 속에 여성의 위치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정치적 기회로 확장시키지 못한 채로 조국 사태를, 인류 최고의 위기라는 기후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넘어 생존을 감각하게 됐습니다. 토론보다 행동으로 지금 권력 집중과 불평등에 대해 함께 분노하는 87학번 페미니스트들을 찾아 연대하고, 이 지독한 불평등의 시대를 재구축할 정치의 역할과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발표문

미투 이후의 정치, 구체적 경로를 만드는 일

이보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보좌관)

(전략)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니만큼 앞서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부조직은 사회를 이끌기는 커녕 최소한의 변화도 따라가지 못하는 도태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뿌리깊은 정치계의 성차별적 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부터 노력하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요구할 수 있는 대책위가 필요합니다. 국회 내 인권센터 등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나 보좌진들이 가장 가깝게 피해 신고 및 상담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각 당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구조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의원 비율은 할당제 등으로 미약하게나마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 보좌관 비율은 20년간 한 자리수에 불과합니다. 남성들이 집중된 조직에서의 법안, 정책, 예산은 젠더불평등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별 보좌진 채용현황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내 교섭단체들은 20대 후반기 국회 구성시 보좌진 성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희생과 증언에만 의존하며 반짝 관심에 그치게 될 상황이 우려됩니다. 성평등 의정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일회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이나 현안대응 수준이 아닌, 성평등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지속적인 계획 마련 및 점점의 상시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MeToo는 조직 내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MeToo가 변화에 뒤쳐진 국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적 구조가 시정될 때까지, 우리는 #MeToo의 이어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8. 3. 19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소속 보좌진 일동

정치계 #미투 이후 1년

사회 각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나온 이후, 국회와 그밖의 정치 영역에서도 예외없이 오랫동안 묵혀 왔던 폐해들이 드러났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서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던 상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극도의 남초공간에서, 비대칭적인 성별 권력관계에 의한 차별과 폭력이 상존하는 곳이 이곳 국회를 포함한 정치계의 민낯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주 근거리에서 만난 가해자의 가해행위, 그들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2차, 3차 가해, 언론의 가세 등등의 행태를 보면서, 그 상식은 파괴되어 자괴감, 두려움, 무기력함으로 다시 차례로 다가왔다.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과 이 정치 공간이라는 곳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계에서의 #미투가 있는 이후로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정 반대로,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의 고발과 국회 보좌진에 의한 미투 이후 오히려 정치영역에서는 후속 고발은커녕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엄혹해진 변화가 느껴진다. 미투 고발 직후, “여자들 무서워서 여성 보좌관 못쓰겠다”거나 “여기자들과 약속 다 취소했다”는 남성의원·남성보좌관들의 비아냥, 조롱성의 발언으로 여성보좌진들이 더욱 위축되었다. 반면 생을 걸고 직을 건 피해자들이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모습은 피해자가 더욱 침묵할 수밖에 없는 무언의 압력이 되었다.

정치계 미투 이후 1년, 상식은 그것을 초월하는 현실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우리는 그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 기존의 좌표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혼란스런 현재를 살고 있다. 오래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시, 발 딛고 선 현재를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발표문

현실정치와 거리두기와 개입,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¹⁾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 여성과 광장

2018년 5월 19일에 처음 시작된 혜화역 시위(‘불법촬영 편파수사·편파판결 규탄시위’)는 6월 9일(2차, 혜화역) 7월 7일(3차, 혜화역) 8월 4일(4차, 광화문광장) 10월 6일(5차, 혜화역) 12월 22일(6차, 광화문광장)까지 7개월간 6차례 진행됐다.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시위에는 차 시위 1만 2천명, 2차 4만 5천명, 3차 6만명, 4차 7만명, 5차 6만명, 6차 11만명 등 모두 30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 시위에 대해 윤김지영은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이자 여성들의 정치적·사회적 연대체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사건”(윤김지영 2018)이라고 평했다.

여성이 광장에 없었던 적은 없으나 여성/젠더의제만으로 이렇게 많은 여성이 광장을 채웠다는 사실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특히 항상 여성들의 지지와 지원, 참여를 갈망해왔던 여성시민단체들에게는 다양한 결의 반성과 고민을 가져다주었다.

여러 고민의 결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광장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는 반응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혜화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11만 명까지 모여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들의 일상은 불안하기만 하다.

물론, 여성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외친 목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동년 8월 9일, 대법원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한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 원심판결(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여성/페미니스트들의 말하기와 투쟁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 글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공식입장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너무나 느리고 한국의 정치(입법·행정·사법)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않고 있다. 잠시 각성을 하는 듯 보이기도 했으나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퇴행적이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는 (성)차별, 배제, 혐오, 불평등 등으로 일상 자체가 위협 속에 있는 다수 시민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대표(representation)의 기능 자체를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사법부는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²⁾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현실 속에서 여성/페미니스트들은 언제까지 광장에 서야 하는 것일까? ‘페미니스트: 닫힌 문을 열고’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피켓문구처럼 한국 여성들은 언제까지 “이 거지같은 일”³⁾로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일까? 광장이 언제까지 생사를 건 투쟁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2) 한 여성의 신림동 원룸에 침입한 남성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보고 강간미수는 무죄로 결론내렸다(JTBC 2019.10.16.).

3) 원래 문구는 “지금까지 이 거지같은 일로 시위를 하다니(I can't believe we're still protesting this shit)”이다.

자유세션

‘성폭력’의 재구성과 섹슈얼리티 정치

사회: 신상숙(서울대)

1_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 참여자들의 분노와 여성 정체성

발표: 고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_세계성으로서 섹슈얼리티: 안희정 사건의 썬진함

발표: 오정진(부산대)

토론: 김소라(숭실대)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문

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 참여자들의 분노와 여성 정체성

고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018년 5월, 한국사회에서 여성 단일 의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인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일어났다. 여성 대상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처벌, 사회적 목인이 이루어졌던 것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이 시위는 6차까지 이어지면서 통산 30여만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로 조직되었다. 전례 없는 대규모 여성 시위가 가능했던 것은 의식화된 동시에 열정적인 실천력을 가진 젊은 세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강간문화와 성별권력구조에 저항(김주희, 2017)했으며, 비조직되었으면서도 매우 열정적인 익명의 개인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행동했다. 이처럼 이들이 기존과는 다른 문제의식과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한 2015년 이후 본격화 된 디지털 성폭력 근절운동에서,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부정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적극적인 저항 실천이 개인적인 동시에 집합적인 정치적 자각과 ‘성별권력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합의의 동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이것이 어떤 과정과 경로로 나타났는지 질문하고 이에 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부정의 상황에 분노하고, 집단화된 정치적 자각을 하게 된 과정과 동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여성들의 내면적 감정 자원의 동학에 주목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에 균열을 내고 여성들을 분노하게 한 구조와 문화가 여성들의 감정 표출과 의식 각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들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왔는지 밝힐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들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관련 해시태그 메시지들을 취합해 분석에 보완적으로 활용했다. 디지털 성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의 해시태그를 추렸으며¹⁾ 이 연구에서 인용한 모든 트윗 메시지는

1) 이 연구에 활용된 해시태그는 다음과 같다. #소라넷하니?, #DigitalSexualcrimeOut, #디지털성범죄아웃, #디지털은_여성폭력의_도구가_아니다, #동일범죄_동일처벌, #구하라를지킵니다, #불법촬영범죄종범

‘다른 말로 바꿔쓰기(paraphrasing)’하여 작성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자 했다.

발표문

세계성으로서 섹슈얼리티: 안희정사건의 썬진함

오정진(부산대)

성은 n개의 성과도 같은 아주 다양하게 결합된 생성들을 노닐게 한다
(들뢰즈 . 가타리, 2001: 528).

I. 성적 존재인 인간

인간은 성적 존재(sexuate being)이자 성적 창조물(creatures)(Cornell, 1995: 6)로서,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인간의 인격과 정체성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그런가 하면 섹슈얼리티는 당해 개인이 속한 세계의 모습, 사회적 관계 등이 드러나는 하나의 사회적 상징(social symbol)이라 할 만하다. 요컨대 섹슈얼리티에 세계가 비춰지며, 또한 행위자들의 섹슈얼리티 실천(practice)에 의해 우리 사회의 섹슈얼리티 자체 및 그를 포함하여 연관된 세계가 변화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섹슈얼리티의 세계성에 대해서는 여성주의의 지평에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성에 관한, 당사자 및 우리 사회의 소위 상식적인 이해와 담론이 다분히 썬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안희정사건을 분석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섹슈얼리티를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행위해나갈 대안적인 세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획세션

젠더화된 법, 법을 집행하는 여성들

사회: 홍진영(서울대)

1_성폭력 ‘가해자/들’의 법적대응과 ‘가해자 카르텔’의 확장

발표: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2_경찰의 성별 직무 분리와 성폭력 사건처리의 한계

발표: 이비현(서울지방경찰청)

3_‘성인지 감수성’ 판례의 의미와 영향

발표: 김선화(수원지방법원)

토론: 추자현(서울대)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문

성폭력 ‘가해자/들’의 법적대응과 ‘가해자 카르텔’의 확장¹⁾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²⁾

이 글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남성/가해자 연대’의 전략을 구축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연대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부추기는 ‘성범죄 전담법인’들의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로 인해 법조계,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즈니스와 개별 남성 가해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상호작용하면서 ‘성폭력 가해자 카르텔’을 구성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최근 법인들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 “무혐의, 무죄 받아드립니다”, “무고 전문” 등의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건수를 늘려 수임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상업화되고 있다. 또한 사업 전략으로서 성폭력 가해자가 고소당한 후 필요한 법적 대응에 대한 ‘스킬’과 ‘솔루션’을 공유하는 카페 및 지침서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조력하는 (전직)경찰·상담소·언론 등으로 구성된 ‘가해자/들’의 네트워크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고, 대응은 ‘공격’으로 전환된다.

특히 SNS를 통해 피해를 공론화한 피해자와 그에 대한 지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이른바 ‘보복성 기획고소’는 피해자들의 연대를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게토화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전유하여 피해자화하는 전략으로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다. 이때 개별 가해자들과 일부 법인, 경찰, 언론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가해자 카르텔’을 구성한다. 향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법인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 및 변호사법 차원에서의 제재나 역고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지만, 성폭력이 인정/불인정, 합법/불법의 영역으로 이분화되고 사법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 이 글은 김보화(2018),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 연대”, 『여성학 논집』, 제35집 2호, 113-153쪽의 글 일부를 참고하여 수정한 글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인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람

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kbohwa@naver.com

발표문

경찰의 성별 직무 분리와 성폭력 사건처리의 한계¹⁾

이비현(서울지방경찰청)

1. 들어가며

최근 3-4년 사이 ‘젠더폭력’,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들이 이슈화되면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불안이 다루어지는 한편, 범죄의 수사와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온/오프라인을 뒤덮었던 ‘미투(#me_too) 운동’과 뒤이어 진행된 ‘해화역 시위’를 통해 성폭력 사건처리를 둘러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터져 나왔다. 이후 2019년 5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경찰을 향한 비난으로 점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경찰청은 성폭력 사건처리를 둘러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장이 나서서 사과하고²⁾, ‘對여성범죄’를 수사하고 관리하는 각종 부서를 새로 편성하고³⁾, 여성·아동의 피해자 조사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 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것이다(반미정, 2019). 사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뒤따른 경찰의 여경 집중 배치는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업무에 여경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은 효과적인가?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경의 필요성이 긍정되고 있다. 한국 경찰의 역사를 검토해 보더라도, 성폭력 관련 업무는 여경의 손을 떠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업무는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 관행의 현 상태와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가능한 대상이다. 이 글은 위와 같

1)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성별 직무 분리를 통해 본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2019)을 수정·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후 3건의 추가 인터뷰와 약 6개월 간의 필자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글에 대하여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청와대 유튜브 ‘LIVE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방송에서 불안하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였다(「오마이뉴스」, 2018. 5. 21.).

3) 2018. 8. -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대상범죄 근절추진단’ 신설,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2019. 5. -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관(여성안전기획과, 여성범죄수사과) 신설

2019. 8. ~ 9. - 서울청 對 여성범죄 신속·민감 대응시스템 운영

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대응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경찰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경찰의 조직문화와 관행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는 경찰조직 내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성별 직무 분리를 통해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직접 수집한 10건의 인터뷰 자료⁴⁾를 활용·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성폭력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눈덩이 표집 방식을 이용하였다.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4) 2018년 5월 ~ 8월에 수집한 인터뷰 자료 7건과 2019년 8월 ~ 9월에 수집한 3건의 자료.

발표문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의미와 영향

김선화(수원지방법원)

기획세션

일터민주주의, 여성의 이해대변과 의사결정 참여

사회: 이주희(이화여대)

1_노동조합의 성평등 실태와 과제

발표: 윤정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_여성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다양한 교섭구조, 잘 작동하는가

발표: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토론: 김금숙(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발표문

노동조합의 성평등 실태와 과제

윤정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I. 문제제기

이 글은 노동조합의 성불평등 문제를 여성노동자 대표성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성평등한 노동조합 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다.

여성노동자 대표성은 노동조합의 여성노동자 조직률, 여성노동자 노조조직 내 할당 비율, 조직체계 등의 자료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이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동조합에 돌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것이다. 민주성을 포함하여 돌봄의 가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위기를 극복하고 조직의 확장성을 이끄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발표문

여성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다양한 교섭구조, 잘 작동하는가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들어가며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교섭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교섭은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교섭이 있을 수 있다. 또 개별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켜 교섭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법적으로는 교섭이 아니나 실제로는 교섭과 같이 이해를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기적이고 법적 구속을 받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이 발전하면 사회적 교섭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는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 쪽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사실 노동자의 교섭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교섭권이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교섭권을 잘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2019년 통계로도 55%인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 (2019, 통계청) 또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2018년 현재 9.4%로 90%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노동자이므로 기존의 노동조합의 교섭으로 한정되면 교섭을 통한 이해의 관철이 어렵다. 비정규직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미만이므로 더 그렇다. (2018, 성인지통계시스템, 여성정책연구원) 이 글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다수를 점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을 다룬다.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가입할 수 없는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교섭의 방식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다루려고 한다.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이해 대변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가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주요한 교섭구조로 상정하여 참여했던 최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교섭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글은 대부분의 내용이 필자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양해바라며 이론적 고찰이나 더 다양한 교섭사례 등은 다른 연구자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

기획세션

돌봄과 친밀성의 새로운 지평

사회: 송다영(인천대)

1_교차적 관점에서의 시설화 비판, 탈시설운동 전망 찾기

발표: 조미경(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2_관계적 친밀성, 관계적 '생존': '사회적인 삶'과 '가족'을 질문하며

발표: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3_친밀함의 공공성 모델을 찾아서: 아동 돌봄 공공성 국제비교와 덴마크 사례

발표: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신지영(연세대)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난주(대구대)

발표문

교차적 관점에서의 시설화 비판, 탈시설운동 전망찾기¹⁾

조미경(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들어가며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돌봄’은 마치 새롭게 맞이하는 사회적 과제인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누군가의 ‘돌봄’에 의해서 생을 이어간다. 살아있는 생명은 돌봄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돌봄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로 축소된 채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상정되어 공론화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²⁾을 발표하는 등 곳곳에서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대상은 제한되어 있고,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이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는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돌봄’이라는 의제는 정치적인 문제임에도 비민주주의적으로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돌봄이 가지는 사회적 과제는 단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재인식’하고, 돌봄을 둘러싼 위계와 낙인, 불평등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 없다면 돌봄은 위계화 된 부차적인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 글은 돌봄의 주요 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장애인이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서의 돌봄이 부재할 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수용시설³⁾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1) 본 글은 최근 장애여성공감에서 진행하고 있는 「IL과 젠더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설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목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고한 <비마이너>라는 언론매체에 기획연재 타이틀에서 인용하였음을 알립니다.

2) 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대상은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이다.

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의 경우 수용시설, 재활시설, 생활시설으로 명명되었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권리임을 선포하며, 이를 위한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장애인 '탈시설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을 논의함에 있어서 누락되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보다는 '쓸모와 생산성'을 강요하는 시대에 탈시설운동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상기하고, 정상성을 중심으로 서열화 된 권력과 자원, 관계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시설화된 삶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연대와 돌봄과 친밀성이 필요한지를 장애여성운동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현재는 단순 수용보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과 자율성이 보장된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로 시설의 관리와 통제 시스템은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기에 본 발제글에서는 내용에 따라서 '수용시설'과 '거주시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발표문

관계적 친밀성, 관계적 생존: ‘사회적인 것’과 ‘가족’을 질문하며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¹⁾

I. ‘사회적인 것’과 ‘가족’을 질문하며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개념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익숙한 권리 개념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성애혼인·혈연중심의 사회적, 물질 토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대와 ‘더이상 당연한 가족’은 없다라는 가치의 출현은 최근에 많은 언론이나 기사들을 통해서 익히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6.3%가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으며,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에 48.5%가 동의했고, 20대의 경우 58.1%에 달했다. 또한 비혼동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가 동의했고, 20대(89.7%), 30대(81.0%), 40대(74.3%) 모두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트위터 상에서도 이성애결혼·혈연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다양한 삶의 ‘선택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1) 언젠가 남편과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동거 생활을 끝내고 결혼이라는 결정을 했을까? 했던 적 있었는데 글썄 안 하지 않았을까가 우리의 결론이었다. 대안을, 바깥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와 이야기들은 정말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

2)생활동반자법 있는 조국에서 죽기 전에 살아볼 수 있을까.

3)생활동반자법 너무 절실하다. 언니가 아플때 무슨 일이 생길 때 동의서를 내가 작성할 수 있었음 좋겠어 내 명의로 된 것들을 넘길때도 아무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아주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싶다.

위의 이야기들은 이성애결혼중심으로 구획된 제도적인 차별을 반문하고 있으며, 결

1)본 발표는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 2019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연구조사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혼을 선택한 현재의 삶에 대한 ‘회고적’ 서사로도 생활동반자법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성애 혼인·혈연 중심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가족’을 지원하는 토론회 공지에 대한 페이스북의 반응에서도 가족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강제해 온 사회적, 문화적인 실체임을 질문하고 있다.

1)(사람들이)어떤 배제와 차별을 받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혼인·혈연 아닌 ‘사회적 가족’의 파트너십 인정하는 사회적 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2)가족이라는 것이 꼭 혈연을 통해서만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듯, 배제와 차별로서 가족을 인지하는 ‘새로운 권리’ 담론의 출현과 정치문화 지형의 변화들은 지긋할만큼 ‘가족’을 정치화해 온 흐름이 취약했던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욕구와 가치들을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진다.

낸시 프레이즈는(2017:93-94)는 후기근대사회에서 탈정치화된 가족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새로운 사회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며, 기존의 가치로부터 탈주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사회적인 것’의 가치로 이야기 한다. 즉 사적인 가족으로 환원되지도 않고 그러나 공식경제 혹은 국가와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닌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내는 공간을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라고 부른다고 의미화 했다. 즉, 삶의 양식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의 의미는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 ‘가정적’ 혹은 삶의 개인적 영역으로 분류되어 온 분리된 경계선을 변경하는 정치화의 흐름과 연결된다.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가정에 속박된 존재들, 경제적인 부흥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 정치적인 삶을 박탈당해 온 여러 갈래의 운동의 지형을 정치화함과 동시에 가정을 사적인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온 탈정치화 된 흐름에 개입하는 것이다.

가족이 공적인 것과 분리된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 가족은 반사회적이며(미셀 바렛:메리 맥킨토시, 2019), 자신의 삶을 지지하는 사회적인 삶의 부재는 사적인 영역에서 삶의 자리를 상실하는 토대가 됨을 이야기 해 왔다(김현경, 2015). 가족을 정치화 하면서 가정폭력이 사적인 것이 아님을 가시화 해 왔고, 남성중심적인 가족임금 체계가 어떻게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해 왔는지를 통해서 가족은 단순히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사회적 제도(a social institution)라는 점을 가시화 했다.(Martha A. Fireman, 1995). 또한, 국가가 상정하는 정상가족, 정상국가라는 가치가 신자유주의적인 능력주의와 연결되며, 인구집단을 ‘이상적인’ 출산을 위한 기능으

로 소환하는 사회에서 생산적인 존재/사회에 폐가 되는 존재는 지속적으로 가족의 정상성을 매개로 작동해 왔음을 논의해 왔다(나영정, 2019).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해서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제공자이자 동시에 남성에게 의존되는, 가정에 종속되는 존재로 간주 되어져 왔고, 남성생계부양자가 없는 가족은 결혼가구가거나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자로 규정해 왔다(송다영·정선영, 2013). 또한, 성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소수자들은 사회에 폐가 되는, 사회적인 삶에 적합한 기능을 ‘상실’한 존재로 사회에서 뭉이 없는 존재로 주변화 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가족 아니면 시설로 제한되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운동은 이성애규범적인 삶의 장소를 강제당해 온 여성과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과 만난다(김순남, 2019).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삶은 제도적 가족을 매개로 작동해 온 차별과 부정을 해소하는 것과 밀접하게 교차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인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 더이상 단일하지 않고 복수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자 하는 비혼운동을 이야기 하면서 상두(2019)는 일부의 비혼 운동이 경제적인 ‘능력’을 통해서 종속성을 스스로 탈피하고자 하는 지점이나, 재테크나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미래를 기획하고자하는 ‘개인되기’의 방식은 또 다시 신자유주의적인 능력주의에 복무할 수 있는 가능성과 만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삶을 만들어 내는 실천을 유보할 때 또 다른 고립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저항이나 운동을 통해서 탄생하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개인이고자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며, 존엄한 권리로서의 삶의 자기결정권과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삶’을 상상하는 삶의 자기결정능력과 근본적인 차이와도 연결된다(김도현, 2019). 김도현(2019:344-345)은 자기결정권은 “이미 여러 주체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견과 판단을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삶의 조건이나 토대를 변형하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의미화 한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삶을 상상하는 자기결정권과 다르게 경제적인 위치나 혹은 능력을 가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자기결정능력”은 신자유적인 생존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존엄한 삶의 가능성은 사회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성은 상호의존적인 삶의 양식이나 시민적인 유대 속에서 탄생할 수 있는 가치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성애 결혼·가족제도를 비판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가족제도는 변하지 않고 공고한 경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족제도 자체가 불안정하며, ‘위기’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한국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부양과 돌봄, 교육, 주거, 교육의 책임을 가족에 전가해온 제도적 가족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제도적 가족주의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에 기반해서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이 강력

한 가족중심주의에 기반해서 작동해온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복지제도뿐 아니라 교육, 주택, 일자리, 심지어 병수발조차도 가족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장경섭, 2018:30). 이렇듯, 가족단위로 삶의 생존과 관계망을 상상해 온 가족주의는 삶의 위기에 취약하며, 이성애 결혼·혈연중심으로 친밀성과 돌봄을 상상해 온 생애과정의 변동은 사회적인 ‘불안’의 증대에도 맞물린다. ‘서울은 안전한가?’의 조사 결과(조권중 외, 2015)에서 서울 도시에서 경험할 위험요소 중에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결과가 고령화, 가족해체, 노후불안과 연결되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81.4%)이 가장 높고, ‘사회생활 관련 위험(70.5%)’, ‘경제생활 관련 위험’(70.1%)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나 ‘사회생활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층별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도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사회제도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의지처가 없으며, 가족의 고립화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보고서에서 20~64세 1500명 중에서 691명이 원가족과 결혼관계에서 가족위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족위기의 내용은 가계 파산, 구성원의 자살, 재난 등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다(32.7%), 물질 자원이 부족하다(30.7%),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30.7%)고 토로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최근 5년간 가족·공동체 지표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와 지역사회 소속감은 50~60% 수준이고 사회적 고립도는 30% 전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사하게 가족의존형 복지국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병에 걸렸을 때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업을 혼자 할 수 없을 때, 동거 가족 이외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별거 가족.친지’로 응답한 비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 반대로 ‘친구’ 응답한 사람은 스웨덴 49.1%, 미국 48.0%, 일본 2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웃은 독일 45%, 스웨덴 30.1%, 일본 15.8%로 매우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다(후지모리 가츠히코, 2018). 결국, 경제 위기나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안전한 삶의 장소로서의 가족 기능은 날로 취약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며, 의지할 곳은 그래도 내 가족뿐이라는 사회적인 이상은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체감되지 못하는 사회적인 간격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삶을 가족에게 일임하는 방식 자체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보다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원정, 2013).

이러한 결과들은 이성애결혼·혈연 외곽에서의 삶이 ‘실패’하거나, 낙인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애결혼·혈연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가 ‘실패’한 사회임을 보여주며, 사회를 다시 만드는 시민적인 삶의 유대와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실천적인 삶을 주변이 아니라 중심적인 가치로 재배치해야만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인 삶의 가능성은 가족의 유지가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이어야 하며,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위기를 이른바 ‘위기가족’이나 ‘취약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시민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접근

해야 함을 드러낸다.

본 발표에서는 연구결과 중에서 다음의 세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1) 이성애결혼·혈연에 귀속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적 친밀성과 시민적인 유대감이 어떠한 맥락에서 기존에 이분법적인 의존/독립의 구도를 질문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사회적’인 삶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더이상 당연한 가족’은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개인들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새롭게 탄생되는 ‘가족’의 의미들이 고정화된, 정형화된 관계의 상에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천착하고자 한다.

3) 가족을 정치화하는 흐름들이 기존에 보호담론이나 차별을 넘어서 어떻게 존엄한 개인되기의 과정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위계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다양한 삶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권리의 출현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발표문

친밀함의 공공성 모델을 찾아서 : 아동돌봄 공공성 국제비교와 덴마크 사례²⁾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서론

1990년대 이래 한국의 돌봄정책은 탈가족화 및 공식화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밟아 왔으며, 특히 2010년을 전후하여 ‘무상보육·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보편주의 원리가 돌봄정책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주의는 실제로는 돌봄의 탈가족화 중에서 비용의 탈가족화에 집중된 것으로, 질 높은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은지외, 2017).

몇 가지 수치를 통해 한국사회 돌봄정책의 공식화의 확장범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우선 아동돌봄의 경우, 아래 표는 김은지외(2017: 100)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아동돌봄기관 이용률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참여정부시기 차등보육료 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중간계층을 포괄하도록 적용범위가 확대된 이래, 기관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만0세의 경우에도 2016년 현재 전체 0세아의 1/3 이상이 공식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1-2세의 경우 80%, 만3-5세의 경우 90% 이상이 공식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보편적 기관이용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관이용률 확대를 급격히 보인 연령대는 만1-2세 아동으로, 만1세의 경우는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2년부터 이용률이 급증하였다(김은지외, 2017: 100-106).

이와 같은 급속한 공식화는 공공이 아닌 민간 전달체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아래 표에서 재계산된 공공기관이용률을 살펴보면, 기관이용률이 80%에 달하는 1-2세아의 경우 10%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만이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이용률이 90%를 넘는 3-5세 아동의 경우 공공기관이용률은 다소 높지만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아동돌봄정책의 기조는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수요자를 지원하고 공급은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것으로 돌봄의 서비스 품질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 본 원고는 김은지 외(2018)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II): 여성·가족관점의 돌봄정책 추진전략」의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이다.

있다(김은지외, 2017: 256)

<표 1> 아동돌봄 기관이용률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세	기관이용률 ¹⁾	25.3	27.9	32.5	38.0	35.2	33.0	32.3	35.8
	공공기관이용률 (재원아대비) ²⁾	2.4	2.2	2.1	1.9	2.4	2.8	3.0	3.5
	공공기관이용률 (총아동수대비) ³⁾	0.6	0.6	0.7	0.7	0.9	0.9	1.0	1.2
1-2세 ³⁾	기관이용률 ¹⁾	48.8	61.7	64.7	71.9	75.6	81.1	82.9	80.0
	공공기관이용률 (재원아대비) ²⁾	8.5	7.9	7.9	7.4	7.3	7.4	8.1	8.9
	공공기관이용률 (총아동수대비) ³⁾	4.2	4.9	5.1	5.3	5.5	6.0	6.7	7.2
3-5세	기관이용률 ¹⁾	67.9	77.2	85.4	84.1	90.8	89.6	87.8	92.6
	공공기관이용률 (재원아대비) ²⁾	13.9	16.1	21.5	18.6	18.8	19.7	20.8	21.2
	공공기관이용률 (총아동수대비) ³⁾	9.4	12.4	18.4	15.7	17.1	17.6	18.3	19.7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보육통계」, 김은지외(2017: 100)에서 재가공.

주: 1) 기관이용률 = 모든 기관 이용아 수(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현원) ÷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2) 공공기관이용률(재원아대비) = 국공립 기관 이용아 수(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현원) ÷ 모든 기관 이용아 수

3) 공공기관이용률(총아동수 대비) = 국공립 기관 이용아 수(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현원) ÷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이와 같이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구조, 비용중심의 이용자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던 기존의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은지 외, 2017). ‘집밖에서 외부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 영역에서는 영리적 목적을 지닌 기관이나 영세한 소규모 시설이 다수 양산되는 문제가, ‘집에서 외부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 영역에서는 돌봄인력의 고용안정성 문제가, ‘집에서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 영역은 불안정한

3) 보육연령은 ‘생활연령’인지 ‘보육연령’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생활연령이 일반적인 만 연령이라면, 보육연령은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배정되는 ‘반’의 연령이다(이정원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보육연령을 적용하는지 생활연령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기관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탈가족화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다(김은지 외, 2017: 27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원리에 기반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돌봄을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검토해보고, 실증자료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다양성에 따라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아동돌봄 공공성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공공성이 가장 명확하게 발현되고 있는 덴마크의 모델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페미니즘 시대의 페미니즘, 격동하는 젠더관계

사회: 이현재(서울시립대)

1_지금, 여기의 래디컬 페미니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통한 성찰

발표: 허성원(서울대)

2_‘페미니즘 전성시대’ 속 모순과 위기가 말하는 것

발표: 정운정(경희대)

3_한국사회 친밀성의 변화?: 연애하지 않는 여성 젊은이들

발표: 임국희(서울대)

토론: 엄혜진(경희대)

민가영(서울여대)

김애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발표문

지금, 여기의 래디컬 페미니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통한 성찰

허성원(서울대)⁴⁾

I. 들어가며

201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재부상하면서 페미니즘 담론장에 래디컬 페미니즘 담론이 등장했다.⁵⁾ 한국의 래디컬 페미니즘은 한때 한국 페미니즘 정치에 새로운 상상력을 북돋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기보다는 낡은 형태의 정치를 옹호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상술하자면, 한국의 래디컬 페미니즘은 르상티망(ressentiment)의 정동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물학적 성, 곧 섹스(sex)를 바탕으로 ‘여성’ 집단의 정체성/동일성(identity)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질주의적 정체성정치에 힘을 싣는다. 이처럼 ‘래디컬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돌출된 목소리나 흐름, 정동은 분명히 실재하지만, 그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래디컬 페미니즘이 특정 정치 주체의 실천이거나 그들이 옹호하는 담론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치의 페미니스트들에게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정치적 수사로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언어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설득력 얻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기에 혼란을 빚기도 한다.

이 논문은 래디컬 페미니즘을 하나의 실천 양식이나 특정 주체에 국한해 이해하기보다 때때로 겹치면서도 서로 불협화음을 빚기도 하는 일종의 목소리로 이해한다. 이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에서 반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젠더는 해롭다’라는 선언과 이른바 ‘정치적 레즈비어니즘’ 선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페미니즘이 ‘모두의 페미니즘’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래디컬 페미니즘을 도덕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은 현재 래디컬 페미니즘의 정치적 수사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사이의 모순을 소거하는 방식에 내포된 정치적 위험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페미니즘이론에서 발전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개념을 통해 이뤄진다. 즉, 이 논문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정을 둘러싼 논쟁을 개념사적 접근을 취하여 요약하면서 오래된 논쟁 속에서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 논쟁에 적절하게 개입할 언어를 찾고자 한다.

4)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tjndnjs718@snu.ac.kr

5) 미완성 원고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문

‘페미니즘 전성시대’ 모순과 위기가 말하는 것¹⁾정윤정(경희대)²⁾

본 연구는 ‘페미니즘 전성시대’에서 나타나는 간격, 즉 ‘왜 페미니즘이 흥하는 시대에 총여학생회는 존폐위기를 맞이하고 있는가’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총여 위기 담론에서는 주로 탈정치, 운동권 혐오 정서, 반페미니즘 백래시현상을 이 위기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페미니즘 전성시대’에서 나타나는 이 모순(정치와 탈정치의 공존)과 위기는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 페미니즘 리부트를 가능하게 했었던 의제들, 운동의 확산방식(매체, 언어양식 등)은 운동의 전환기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지금의 전환기를 읽어내기 위해, 1) ‘운동’ 개념의 재정의 필요성 그리고 2) 정동경제에 기반한 투쟁의 한계라는 두 축을 세워보고자 한다. 1의 접근을 통해 페미니즘 정치에서 (재)구축되어야 할 관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2를 분석함으로써 운동 의지를 강화 혹은 통제하는 장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진행중인 논문이므로 타 자료에서 인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yoonjung1917@gmail.com

발표문

한국사회 친밀성의 변화?: 연애하지 않는 여성 젊은이들

임국희(서울대)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연애를 거부하는 현상¹⁾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친밀한 관계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젠더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표다. 연구를 이끌어 가는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비연애’와 ‘탈연애’는 무엇을 부정하는(非) 것이며 무엇으로부터의 벗어나기(脫)인가? 이러한 여성들의 변화를 촉발한 사회적 · 문화적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젠더 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 이 발표문은 현재 한국사회의 친밀성의 변화를 조망하기 위한 시도의 기초적인 단계의 것이다.

2. 연애, 여성의 개인되기

200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이 공적인 성취를 이룸으로써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현재 20대인 여성 젊은이들은 ‘알파걸’ 담론을 통과하여 성인이 되었고 여성 대학 진학률이 최초로 남성을 초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취업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공통의 전망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장기지속 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인해 언제 취업이 될지 불안해하며, 취업이 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 지위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여성들은 취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²⁾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물질 토대로서의 경제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열망 역시 좌절되고 있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에 한 의

1)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 연애’를 비판하는 현재의 모든 움직임들을 포함한다. 이를 지칭하는 하나의 정식화된 용어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하나의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 아직 해석이 요구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오히려 재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시도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맥락에 따라 ‘비연애’, ‘탈연애’, ‘연애하지 않는 여성 젊은이들’, ‘연애를 거부하는 현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하였다.

2) 시사인.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1등도 떨어지다.”(2019.10.23.일자)

학전문대학원 학생의 데이트폭력 사건, 진보논객의 데이트폭력 사건 등이 공론화됨에 따라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한편 연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회의감 역시 팽배해지고 있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연애를 거부하는 현상은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열망이 2000년대 이후에 꾸준히 좌절한 데서 기인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성들이 그 좌절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은 더욱 크게 키우는³⁾ 반면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동일하게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 대신 결혼을 택하는 것을 칭하는 ‘취직’과는 정반대의 전략이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왜 하필이면 공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포기하는 대신 사적인 영역에서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가? 개인화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 독일의 사회학자 벡(U. Beck)은 개인화를 두 단계로 구분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개인화의 두 번째 단계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⁴⁾ 개인화 2단계는 이미 사회제도 속에서 유의미하게 규정된 개인이라는 존재로부터 이차적으로 진행되는 ‘성찰적 개인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성찰적이라는 의미는 ‘스스로로부터’ 변화한다는 의미이다(홍찬숙, 2015: 31-32). 전 지구적으로 증대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반응하면서 외부의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동하려는, 즉 ‘자기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개인들의 사생활 문제는 이전처럼 소유나 가족의 사적 통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삶’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오늘날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연애를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친밀한 영역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추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의 변화는 적극적으로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연애, 가부장적 규범이 강화되는 핵심장소

오늘날의 연애를 거부하는 주장 속에서 연애는 결혼으로 맺어지는 가족만큼 가부장

3) 공적인 공간에서 성공을 욕망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야망보지’가 있다. 위마드위키(<https://www.womad.life/wikis>)에 따르면 ‘야망보지’는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여성들을 일컫는 용어인데 이는 단지 위마드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트위터에서는 ‘#비혼여성의_삶’이나 ‘#야망보지_실천’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쓰인다(여성신문, “롤모델없는 90년생 여성들, ‘야망’ 드러내다.” 2019.10.25.일자 참조).

4) 개인화의 1단계는 사회적으로 개인이라는 범주가 무의미했던 전근대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추상적, 보편적 개인이 형성되었던 과정을 의미한다. 벡(2006)의 『위험사회』와 홍찬숙(2015)의 『개인화』의 1장 “개인화와 사회불평등” 참조.

적 규범으로 인해 여성의 주체성이 박탈되는 장소로 여겨진다. 연애에서 통용되는 가부장적 규범 중 대표적인 것은 성별/성역할 고정관념이다. 비연애, 탈연애를 주장하는 이들은 1990년대의 영페미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연애 관계 내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도화하는 연애 각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2019년 여성의 날에 프로젝트팀 ‘탈연애선언’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상연애 장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탈연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애 관계로부터 아예 벗어나(脫) 연애 자체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정상화’된 연애 문화를 일컫는 말인 ‘정상 연애’를 상대화하고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이 ‘정상 연애’에 대해 거부하는 여섯 가지 내용 중 하나가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종다양한 인간을 ‘남자’와 ‘여자’ 역할에 가두는 성별역할극에 반대하고, 이를 강제로 수행하게 하는 이성애중심주의에 반대한다.” 프로젝트팀 ‘탈연애선언’은 성역할고정관념에 기반한 연애 관계 내의 실천들을 ‘성별역할극’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한다.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기득권에 속해 있는 것은 남성이며 여성은 소외되어 있는 성별”이며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은 남성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투데이신문, 2019.4.23.일자). ‘비연애인구 전용잡지’를 표방하고 2013년에 시작되어 현재 14호까지 발간된 《계간홀로》에서도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13호에 실린 글인 <‘엄마같은 여자’ 찾고 자빠졌네>에서는 “‘엄마 같지만, 엄마와 비슷한 연령대여서는 안 되며, 어릴수록 좋지만 아직 서툴고 철이 없는 나를 포근히 감싸줄 수 있어야 하고, 나를 아낌없이 채워주지만 검소한’ 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모순과 분열”(김송, 2018: 45)이라는 표현을 통해 연애시 여성에게 할당되는 고정적인 역할이 실제로 얼마나 터무니없으며 여성에게 억압적인지 지적한다.

4.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 젠더화된 생애 전망

배은경(2009)은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사회 여성들의 선택을 가늠해보면서 여성들의 생애전망이 젠더관계의 변화와 계급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 근대적 성별분업에 기댄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억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젠더보상체계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이 지배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행위할 때 여성 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상징적 차원의 보상이 뒤따라오는 것을 의미한다(배은경, 2009: 46). 비연애/탈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한국사회에서 유지되었던 젠더보상체계의 유효성을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젠더보상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데는 여러 배경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근대적 성별분업이 불가능해진 현실적 조건이다.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여성이 돌봄노동의 역할을 하는 엄격한 성별 분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거나 극소수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다. 여성들 역시 맞벌이를 해야만 핵가족의 생계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더불어 앞서 논의한대로, ‘알파걸’ 담론을 관통하며 성장한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공적 공간에서의 성취와 경제력의 확보를 다른 어떤 과업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데 여성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젊은 남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애 전망에 돌봄노동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2019년 2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가 함께 기획한 토론회의 발표문에 따르면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만 19세에서 24세 남성들 중 20.7%이 여성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들 중 6.1%가 그렇다고 답했다 (김경희 · 마경희, 2019: 37). 몇 달 전 트위터에서 ‘남초 커뮤니티는 매우 많으면서 대디카페도 육아게시판도 없다’는 내용의 트윗이 수 백 번 리트윗 되는 것을 보았다.⁵⁾ 또한 여성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들은 데이트나 ‘남친’에 관련된 고민을 하루에도 수 백 개씩 올리지만 남성들은 고작해야 자신들의 파트너를 ‘김치녀’로 깎아내리는 글만 올린다는 불평등한 상황을 성찰하는 게시글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경제활동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었지만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적으로 할당되어 있다는 인식이 젊은 여성들에게 심적 타격을 주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젊은 여성들은 취업이나 결혼을 하기 전부터 자신의 경제 활동과 돌봄노동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나, 남성들이 돌봄노동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하게 되는 것은 아이가 생기고 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일과 사랑의 조율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은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것이다.

5) 트위터 유저인 @Themangbba가 2019년 7월 31일 트윗한 내용을 참조했다.

기획세션

디지털 정치 공간에서의 젠더정의

사회: 김예란(광운대)

1_ '표현의 자유' 담론과 혐오표현 문제

발표: 김수아(서울대)

2_ 탈 진실 시대의 페미니스트 발화

발표: 김보명(부산대)

3_ BL 소설 세계관 분석을 통한 가상적 섹슈얼리티 생산 가능성 연구: 알파/오메가 섹슈얼리티의 페미니즘적 해석을 중심으로

발표: 장민지(연세대)

토론: 김민정(한국외대)

정승화(연세대)

손희정(연세대)

발표문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¹⁾

김수아(서울대)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가 성취해 낸 인간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제안들은 억제효과(chilling effect)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만나는 일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를 시도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고, 권위주의 정부를 경험한 나라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해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 판단과 법원 내의 정치가 아닌,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담론 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 이 담론적 연술은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외양 아래 작동되는 권력의 구조들을 가리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2014년 한국 국내 법 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 이 시기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소위 가상 포르노그래피라 지칭되는 매체물 즉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되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매체의 규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에서도 그리고 타 국가에서도 논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상의 경우에도 아동성착취 영상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나라가 있고, 가상의 경우는 실질적인 침해가 없다고 보아 위해 규제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논의 당시 우리나라의 담론 구조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둘러싸고 형성된 것이 특징적이다²⁾. 음란물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담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요한 담론 구조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에 관한 논의에서 음란물 또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³⁾ “해당

1) 이 글은 자료집 수록을 위한 발췌문으로, 완고가 아닙니다. 완고가 아니므로 인용 등은 미리 상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김소라(2019). 음란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규제의 한계와 그 부정적 효과.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포럼 발제문 2019.7.22.

3) 헌재 2009. 5. 28. 2007헌바83;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표현이 가지는 위해성을 해소하고 수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상의 자유경쟁 시장의 역할”이라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⁴⁾. 이러한 논의가 동일하게 반복된 것이 바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의 SNI 필드 기술 활용 보안접속(https) 차단(https차단)에 대한 반론들이었다.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성인물 자체를 금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과도한 표현의 자유 규제이자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1) 성인에게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자유를 다르게 보는 전제 2) 표현이 위해성이나 해악을 갖는지는 표현 자체를 막아서가 아니라 표현된 이후의 사상의 공개 시장에서 논의될 일이라는 전제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두 번째 전제에서, 표현된 이후 사상의 공개 시장 논의는 무엇을 담보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가상의 민주정치 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행된다고 가정될 때,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법적 권리이자 불가침의 권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공론장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토론 공간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의견 제시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며, 만약 정말로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법으로 의뢰하여 판결을 받아올 것을 주장하는 것이 현재 인터넷 담론 구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게다가 종종 법의 맥락에서 해당 표현이 위해성을 갖는 표현으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 판결이 다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가까운 사례로, 래퍼 블랙넛의 가사 논란이 생겼을 때, 힙합 커뮤니티의 블랙넛 지지자들이 제시한 주장은 해당 가사를 명예훼손등의 이유를 들어 규제하는 것은 래퍼 블랙넛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구도에서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 실행된 후,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견이 조정되는 과정이 없다. 개인의 의견은 불가침한 의견이며 이에 대한 비판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담론이 형성되고 만다. 비판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행위라는 인식은 현재 한국의 온라인 문화에서 매우 보편적인 담론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여 발화하는 이들이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블랙넛의 경우를 돌아볼 때, 커뮤니티의 여론이 바뀌는 순간은 명예훼손임이 법적으로 확증을 받는 순간에 있다. ‘여성혐오’ 논란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나, 개인을 모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인식 구조가 여기 자리한다. 법이 움직일 수 없는 최종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며, 현재의 법은 개인은 모욕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는 불가침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믿고

4) 김우성(2016).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저스티스, 153, 5-36.

있는 것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추상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을 상상하면서 주장될 때, 명예, 모욕, 차별, 혐오표현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개인의 권리가 먼저 등장한다. 이는 법학자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입장과는 다른, 문화적이고 담론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 권리이며, 이 개인의 의견이 대상으로 삼은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는 현재 없고, 따라서 집단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만 그 침해를 구제받게 된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발표문

탈진실 시대의 페미니스트 발화

김보명(부산대)

1. 탈진실의 시대?

탈진실(post truth)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2016년 탈진실을 그 해의 용어로 선정했던 옥스퍼드 사전은 탈진실을 “사람들이 사실(facts)보다는 감정(emotions)이나 신념(beliefs)에 더 반응하는 상황에 관련된” 용어로 정의하였으며, 콜린스 사전과 맥밀란 사전 또한 유사하게 탈진실을 “사람들이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보다는 자신들이 이미 가진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영향받는 상황”이나 “감정이나 신념이 선호되면서 진실이 무시되거나 방기되는 상황이나 체계에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¹⁾ 세 개의 사전적 정의에서 모두 ‘탈진실’은 (사람들이 이미 가진) 감정과 신념이 실제적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게 작동하는 새롭게 등장한 인식론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지칭하고 있다.

탈진실에 대한 우려는 2016년에 일어난 브렉시트 사태와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확산되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장에서 정확한 정보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의미 없는 수사적 표현의 남발과 구체적인 근거 없는 루머가 조장하는 대중적 공포와 분노 속에서 힘을 잃어갔다. 근거 없는 이민자에 대한 공포감 확산과 백인/시민권자/정착자 약자론, 기후위기가 진화론 부정, 역사 수정주의, 포스트페미니즘과 남성피해자론, 백신 접종 거부 등은 모두 탈진실 정치학의 단면들이자 탈진실 정치학이 어떻게 우파 대중주의(alt right popularism)와 만나면서 반지성주의와 권위주의를 확산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²⁾ 의심과 불안, 공포와 분노로 추동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확산되는, 비판적 판단이 더이상 가능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는 탈진실 정치학의 태도는 (사실과 정보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가공하고 배치하면서 견고한 세계관을 만들어낸다.

1)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post-truth>
<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post-truth>
<https://www.macmillandictionary.com/dictionary/british/post-truth>

2) 최근에는 동물용 구충제가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환자들의 경우나 조국 전 법무장관 임용 과정에서 나타난 뉴스 및 인터넷 (오)정보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출판물을 기점으로 다시 소환된 과거사 논쟁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탈진실’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진실(truth)에 대한 규범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내포한다. 즉 ‘진실’이 존재하고 작동할 뿐 아니라 그러해야 한다는 태도이다.³⁾ 그러나 무엇이 진실이 존재하는지부터 의심받는 탈진실의 시대에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난제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채널들인) CNN,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등을 가짜 뉴스의 주범으로 명명하고 가짜 뉴스 상을 수여했던 에피소드는⁴⁾ 탈진실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잘못된 정보나 거짓말, 프로파간다, 유언비어, 찌라시, 도시 괴담 등은 그 자체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것의 양적 증가나 디지털 매체를 통한 확산은 새롭다. 그러나 진실의 위기는 가짜 주장 자체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있기보다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혹은 구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철학적 근거나 규범적 기준, 혹은 제도적 절차의 부재나 혼란 때문일 것이다.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내용 없는 정치적 수사의 범람, 전문(가들이 생산해내는) 지식에 대한 불신 등은 물론 그 자체로도 문제적이라 할 수 있지만, 보다 어려운 지점은 그러한 정보와 주장들이 ‘사실’ 혹은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공통적인/보편적인 준거나 절차에 대한 합의의 불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합의 가능성이 왜 필요한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변화에 있을 것이다. 백승덕(2017)이 지적하듯 탈진실은 거짓말과 구별된다.⁵⁾ 거짓말이 그 대항점인 진실을 전제 및 인식하고 있다면 탈진실은 “진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노를 일으키고 공포를 조장할 수만 있다면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의 발화 양식이다 (127쪽). 탈진실이 드러내는 현실은 각자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자신(만)의 매체를 통해 수용, 전달, 그리고 때로는 생산하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배타적이고 고립된, 소통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이다.

통제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위기들의 등장,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무능이 초래하는 사회적 불안과 분노, 혹은 무기력,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쇠락과 디지털 1인 매체의 확산,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기회주의자들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이고 복잡하지만 동시에 경험적인 문제들에 대한 가용한 해석들을 확립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실천 등은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탈진실의 시대를 추동한다.

3) Lee McIntyre, Post-Truth, MIT Press, 2018, p.6

4) 김균미,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길 수 있을까” 관훈저널 60권 1호 (2018), 67-75쪽.

5) 백승덕, “읽지 않고도 편이 갈리는 책 -탈진실 시대에 『제국의 위안부』를 읽는다는 것,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3” 카톨릭 평론 7호 (2017), 127-136쪽.

발표문

BL장르 세계관 분석을 통한 가상적 섹슈얼리티 생산 가능성 연구 - 알파/오메가 섹슈얼리티의 페미니즘적 해석을 중심으로

장민지(연세대)¹⁾

본 연구는 보이즈 러브(Boys Love) 장르의 특정 세계관 분석을 통해 가상의 섹슈얼리티 생산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욕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이즈 러브 장르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 독자들을 이용 대상으로 생산된 남성동성애서사물을 통칭한다. 보이즈 러브 장르의 경우 이전까지 동인물이나 야오이물로 불려온 역사가 있으나 웹 콘텐츠 전문 플랫폼의 등장과 이에 따른 카테고리 분류로 인하여 BL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즈 러브 장르 중에서도 알파/오메가 세계관은 기존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가상의 섹슈얼리티인 알파와 오메가를 부과함으로써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세계관이 제시하고 있는 가상의 섹슈얼리티 확장성과 의의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오메가버스로 범주화된 BL 장르의 서사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읽는 독자들의 독서 욕망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콘텐츠의 세계관 공유와 이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용자들의 욕망을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²⁾.

1) mingi.jang@gmail.com

2) 이 논문의 경우 미계재 논문이며, 추후 발표할 예정이 없으므로 인용 시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³⁾

전무님이 내게 언질을 준 것은 호의이되 당연한 것이었으리라. 오메가도 아닌 베타의 남성이 자신을 좋아하는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전무실로 걸어오는 동안 마주하는 유리문, 책상, 키카 큰 화초. 그런 물건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과 다를 게 뭐 있겠냐는 뜻이다. 폐로몬적 교류도 없고 유혹도 할 수 없는 무색무취의 내 감정은 그에게 어떠한 감흥도 없으리라.

해이리(2019) <미스터 디어(MR.DEAR4)> 1권 51-52쪽

이 연구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BL장르 중에서도 하위 장르로 표방되는 ‘알파/오메가 세계관(universe 혹은 A/U)’⁵⁾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용자의 독서 욕망을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하고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파/오메가 세계관이란 기존의 남성과 여성 이외에 알파, 오메가, 베타라는 가상의 섹슈얼리티를 더한 하나의 평행 세계를 뜻한다. 남성 알파와 여성 알파는 둘 다 사정이 가능한 페니스가 존재하며, 남성 오메가와 여성 오메가는 둘 다 임신이 가능한 자궁이 존재한다. 베타 남성과 베타 여성은 현실세계와 동일한 생물학적 성별 구분체계를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녀 지정성별과는 상관없이 오메가는 임신이 가능한 성별, 알파는 사정이 가능한 존재로, 이 세계관에서 알파 여성과 오메가 남성은 기존의 남/녀 성기를 모두 가진 젠더트러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이 장르가 BL에서 ‘오메가버스’로 주로 불리는 까닭은 남성동성애 서사에서 흡입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남성 오메가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임을 감안할 때, 이 세계관에서는 임신이 가능한 오메가 남성의 존

- 3) 본 연구에서는 장르소설과 웹소설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BL 장르를 이해하기 위해 웹소설과 장르소설을 하나로 용어로 통일하지 않은 것은 각각의 용어가 가진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장르소설과 웹소설은 각각 콘텐츠의 내용과 미디어 기술에 따른 분류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에서 장르소설은 순수문학이 아닌 모든 비주류소설을 통칭하는 것이다. 웹소설은 종이소설이 아닌, 웹으로 최초로 연재되어 유통되는 소설들을 명명한다. 여기서 웹소설과 장르소설은 공통분모가 생기는데, 순수문학이 최초로 종이책으로 발간되어 출판되는 반면, 비주류로 통칭되었던 장르소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이후 인터넷을 통해 연재되거나 전자책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장르소설이라 말할 때는 BL이 가진 비주류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웹소설이라 말할 때는 그것이 유통되거나 생산된 방식인 매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4) 해이리의 2019년 웹소설 연재작. 오메가버스에서 베타는 알파와 오메가에게만 작동되는 폐로몬 시스템에서는 철저히 배제된다. 이 소설은 초반 베타로 설정된 오메가가 알파를 짝사랑하면서 폐로몬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알파의 연애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 5) 알파/오메가 유니버스(세계관) 혹은 오메가버스(오메가+유니버스)라고 불리는 BL(보이즈 러브/혹은 남성동성애 서사) 장르의 하위 장르. 웹상에선 축약어로 알오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차후 알파/오메가 유니버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지만 서론에서 간략히 의미를 밝힘으로써 사전에 본 연구의 독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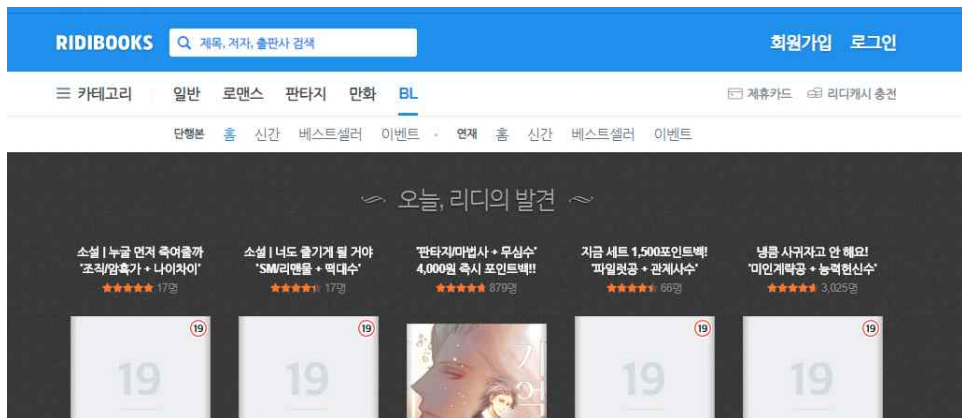
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연재되는 만화와 소설을 지칭하는 웹툰과 웹소설의 탄생은 여러 측면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하위 장르의 가시화와 상업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주류로만 존재하던 콘텐츠가 수용자들의 요구를 통해 가시화되면, 이 장르는 상업적으로 고착화되어 주류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자체 생산되거나 특정한 집단에 의해 (어둠의 경로)로 소비되었던 BL 콘텐츠의 기획과 유통, 수용에 있어 웹툰과 웹소설 유통 및 유료 플랫폼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매체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보이즈 러브(BL) 콘텐츠를 소비하는 집단은 특정한 취향공동체로 존재해온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BL의 역사는 용어의 변천과 함께 사회문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초반 BL 장르는 ‘동인물’ 혹은 ‘야오이’라는 용어로 호명되었다. 대부분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상상하거나 욕망, 생산되는 것으로 상정되었던 ‘동인물’과 ‘야오이’는 그 용어의 기원처럼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국내에선 번역되어 존재하거나 이를 본 수용자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동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동인문학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서브컬처로서 존재해온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용어에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여성이 향유하는 남성동성애서사와 에로티시즘이 극대화된 문학 혹은 콘텐츠를 동인물과 야오이라 불렀던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 현재 그 장르는 보이즈 러브(BL)로 통칭되어 웹툰/웹소설 플랫폼⁶⁾에서 분류되고 있다.

6) 2008년 설립한 리디북스는 2019년 6월 기준 누적 전자책 다운로드 약 5억 9607만건, 서비스 도서 수 약 212만 권, 제휴 출판사 2548개를 기록하며 기업가치는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9.0820.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65687>). 국내 전자책 시장 점유율 1위인 리디북스의 모바일과 웹 화면에는 전자서적 중에서도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분류되어있는데, 일반/로맨스/판타지/만화, 그리고 BL이다. 플랫폼의 UI가 이용자들의 편의성에 의해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통해 유추해보면, 이는 장르와 매체 구분에서 BL이 전자책 시장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리디북스 첫 화면(2019.09.16.)

현재 이 카테고리 분류되어 유통되는 콘텐츠 장르로는 인쇄만화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e-book으로 업로드된 디지털 만화, 세로 스크롤의 웹툰, 그리고 웹소설이 있으며, 웹소설 중에서도 상업화되기 전 동인소설로 비공개 회원제 커뮤니티 내에서 연재되거나 유통되던 작품들이 실제로 다시 e-book으로 재판매·재유통되고 있는 BL소설 등이 존재한다. 에바 일루즈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분석하면서, 연애 소설이나 모험 소설이 순수 문학이나 예술의 영역이 아닌 오락의 대상이었으며 주로 사적으로 소비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이러한 장르문학이 여전히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나 검열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의 상당부분을 잃게 되었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illouze, 2013/2014, 12) 특히 인터넷 시대에 웹소설/웹툰 플랫폼의 등장은 이처럼 사적으로 소비되던 콘텐츠 장르의 공개적 여론형성을 촉발시켰다.

그 중에서도 알파/오메가 세계관⁷⁾은 웹소설/웹툰 플랫폼 내에서 공개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소수 취향이 아닌 “지극히 현대적인 맥락 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 욕망의 한 형태”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이현지, 2018, 65). 알파/오메가 세계관은 (이후부터 본문에선 오메가버스(omega universe)로 통칭한다)은 그 유래에 있어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미국 영화 시리즈인 <스타트랙>의 발칸족과 늑대인간의 특성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섹슈얼리티인 오메가와 알파, 베타가 존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SF 장르 영화인 스타트랙에서 발칸족은 7년 주기로 생식기가 찾아오는데서 이성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등 이 때 제대로

7) 세계관이란 콘텐츠 내부에서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는데(서성운, 2009), 이전까지 철학적인 용어로 대두되어왔으나 현재는 하나의 콘텐츠를 둘러싼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나 서사들을 통칭한다. 국내에서는 세계관 혹은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유니버스라 부르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유니버스의 축약어인 버스(verse)를 조합하여 그 세계관의 특정 설정을 설명하는 것이 관례적이다(ex : 오메가+버스).

대처하지 않으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사망하기도 하는 설정을 갖고 있다⁸⁾. 이러한 성적 호르몬 설정과 늑대인간이 평생 하나의 짝에게 각인⁹⁾한다는 설정을 조합하여 만든 가상의 대안 세계(another universe 혹은 alternative universe를 뜻하며 AU라는 용어로 통용됨)가 바로 오메가버스다. 이러한 기본적인 설정 하에 창작자는 마음대로 세계관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며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관 창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2차 창작, 즉 원본의 패러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¹⁰⁾.

이 논문은 BL 콘텐츠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세계관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오메가버스’에 나타난 여성의 독서/생산욕망을 알아내는 것을 핵심 연구문제로 삼는다. 독서욕망은 단순히 수용자 측면의 단선적인 ‘수용미학’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실제로 이 용어는 “70, 80년대 작품속의 특정 장치나 서사를 즐겨 소비하는 독자의 욕구(안상원, 2018, 281쪽)”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2차 창작은 ‘원본의 독해 후 생산’ 즉, 소비와 생산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텍스트 해석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맥락 전체를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갖는다. 특히 남성동성애 서사를 꾸준히 소비하는 여성(으로 상정되는) 향유층이 존재해온 만큼, 2000년대 후반 2차 창작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오메가버스가 인기를 얻고 소비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8) 위키 백과 별건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B%B2%8C%EC%BB%A8_\(%EC%8A%A4%ED%83%80_%ED%8A%B8%EB%A0%89\)](https://ko.wikipedia.org/wiki/%EB%B2%8C%EC%BB%A8_(%EC%8A%A4%ED%83%80_%ED%8A%B8%EB%A0%89))

9) 한 때 인터넷 소설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수익을 거둔 헐리우드 영화 <트와일라잇>(2008) 시리즈에 등장하는 늑대인간 ‘제이콥’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이콥 블랙은 포크스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으로 후각도 예민하고 인간보다 훨씬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는 트와일라잇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벨라 스완의 딸에게 각인한다. 늑대인간은 늑대의 동물적 습성을 가진 인간 종을 뜻하는데, 늑대의 본능에 기인하여 ‘각인’을 통해 단 하나의 짝을 찾고 평생 함께 한다. 여기서 각인은 인생의 단 하나, 운명의 짝을 만나는 것을 뜻한다.

10) 오메가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룬 논문인 <한국 BL 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 오메가버스(omega-verse)를 중심으로>에서는 이 세계관이 “서구권 팬픽션 팬덤 중 하나인 미국 드라마 <슈퍼 내추럴>(2005)에서 파생된(이현지, 2018, 5쪽)”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이현지의 석사 논문은 본 연구의 주제가 정해진 시점(2019.1월) 이후인 5월에 알게 되었으며, 연구자에게 요청하여 논문 전문을 읽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BL 논문 중 오메가버스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이현지의 것이 유일하다. 이현지의 논문은 오메가버스의 역사와 특징, 섹슈얼리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오메가버스 텍스트가 여성 향유자와 맺고 있는 관계를 깊게 탐구하여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으나, 진행정도를 고려했을 때 연구를 중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속하였음을 밝힌다.

기획세션

#미투 이후, 광장 민주주의와 젠더정책 로드맵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1_문화예술계 미투운동과 성평등 문화정책

발표: 박소현(서울과기대)

2_‘페미니즘 리부트’와 디지털 성폭력

발표: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3_디커플링(decoupling)과 젠더: 대학 성폭력·인권 문제 제도화의 착종을

중심으로

발표: 유현미(서울대)

토론: 홍기원(숙명여대)

김주희(서강대)

최김하나(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발표문

문화예술계 미투운동과 성평등 문화정책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00계_내_성폭력’ 운동과 문화예술계의 주도적 위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라는 언명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인식습관 속에서 이 사태를 다루게 한다. 그것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상 ‘문화예술계’를 사회 속의 작은 사회, 또는 구조 속의 한 부분 정도로 인식하는 위계적이고 건축적인 세계상을 미투운동에도 투영한다면,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란 광범위하게 확산된 미투운동의 부문운동 정도로 간주되기 십상이고, 그 효과는 보편운동으로서의 미투운동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에 앞서고 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경계하고자 하는 우선적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미투운동의 전사처럼 거론되는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운동 속에서 문화예술계가 차지하는 위상과 이 운동에 대한 규정력 때문이다.

이 해시태그운동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먼저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 공간과 해시태그가 저항적 미디어 또는 플랫폼로서 정치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미디어문화연구 차원에서의 논의들을 볼 수 있다(김효인 2016; 김효인 2017; 주은혜·백영민 2018; 신정원 2019; 김보명 2018a). 또한 미투운동을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반성폭력운동의 계보학 내에 위치지우고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적, 제도적 전환을 촉구하기도 한다(김보화 2018). 끝으로, ‘#00계_내_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그 연속성을 충분히 추론케 하는 연구들로서, ‘페미니즘 리부트’의 맥락에서 강남역 살인사건(2016) 이후 2030세대 여성들의 정치화와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손희정 2015b; 김보명 2018b; 김현미 2018; 김효인 2016; 김효인 2017). 이러한 접근들은 모두 성폭력 해시태그운동이 갖는 중층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들 연구 중에서 2016년 이후 해시태그운동에서 유독 문화예술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그런 와중에 김효인은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00계_내_성폭력’ 고발운동에 대한 인터넷 에스노그래피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충실히 포착함으로써, 이 해시태그운동이 서브컬처와 예술계 유명인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짧은 기간 내에 20여 개로 불어난 해시태그들이 대부분 문화예술계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었

다(표 1, 표 2).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6-2017년 사이에 생성된 해시태그 24개 중 가족, 운동권, 교회, 스포츠계, 직장, 교민사회 등 6개의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해시태그는 문화예술계이거나 이와 명시적으로 연계된 범주(대학, 학교, 교육계 등)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2>의 타임라인은 해시태그운동이 오프라인상의 시위나 토론회, 그리고 새로운 여성단체 결성 등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면서,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운동이 단순히 SNS상의 성폭력 폭로나 고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제도적·정책적 개입과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현재진행형의 운동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운동은 그 출발점은 해시태그였으며, 해시태그 바깥의 제도적·정책적 개입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현장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한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러나 ‘#00계_내_성폭력’ 운동과 ‘미투운동’이라는 용어사용에서의 인식적 간극은 흥미롭다. 가령, 페미위키의 ‘Me Too’ 항목을 보면, “한국에서 꾸준히 일어나던 성폭력 고발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미투’ 형식으로 점화된 최초의 계기는 2018년 1월의 검찰청 내 성범죄 및 성폭력 폭로”라고 기술되어 있어, 문화예술계가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00계_내_성폭력’ 고발운동은 ‘미투’의 전사로 인식되는 경향을 드러낸다.¹⁾ 언론에서의 주목도나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고발대상의 사회적 권력의 강도가 한국사회에서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감지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00계_내_성폭력’ 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여성들의 고발과 행동을 통해 시작되고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미투운동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과 달리 한국에서의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라는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발생한 것은 왜일까?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페미위키 <https://femiwiki.com/w/MeToo> 관련 서술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꾸준히 일어나던 성폭력 고발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미투’ 형식으로 점화된 최초의 계기는 2018년 1월의 검찰청 내 성범죄 및 성폭력 폭로이다. 이전에도 2016년 10월 말 00계 내 성폭력이라는 패시태그를 통해 각계 성폭력 피해사실들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발표문

‘페미니즘 리부트’와 디지털성폭력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공감의 시대, 페미니즘 리부트

한 노령의 문학평론가는 인터뷰에서 지금은 ‘공의보다는 공감이 먼저인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다.¹⁾ 그는 AI 시대엔 생산량이 과잉이기에 물질이 자본이던 시대는 물 건너 갔다고 말한다. 물질 자본보다는 이제 공감이 가장 큰 자본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서 공의(公義)에 연결되는 키워드는 도의, 공공선, 정의 등이 되고, 공감(共感)과 연결된 키워드는 감정, 개별성, 존중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의보다 공감이 먼저인 시대’라는 표현은 이 사회 전체의 흐름이 변해가는 방향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페미니즘 리부트 물결이 지나가는 자리,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힌트가 되기도 한다.

모든 페미니스트가 그렇듯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또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다른 여성의 삶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각성했다. 이는 ‘공감’의 맥락 속에 있는 일들이었다. ‘나’라는 고유한 주체가 존중받기를 원하며 다른 이의 문제에도 연대하는 이 과정은 공감의 키워드들과 맞닿아 있다. 주체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정할 때 공감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는 내 존재의 고통에 이 세계가 공감해줄지 바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디지털성폭력(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이슈가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에게 중요한 주제가 된 이유도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물론 온라인 중심의 페미니즘 물결과 디지털네이티브 세대라는 요소 또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디지털성폭력은 ‘내가 체감하는 일상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해화역 시위에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로 많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었다. 공의와 같은 ‘그래야 함’이 아니라 공감이 우선되는 세대 속에서 ‘내 삶’의 목소리가 전달되면서 이 세대의 페미니즘은 더욱 강력한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공감이 먼저인 시대라고 할지라도 공감으로만 끝날 수는 없다. 공감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속도를 알려준다. 우리는 이 공감을 통해 그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감 이후 그것의 문제해

1)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8/201910180302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결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방식에 공의가 있다고 믿는다. 세상의 규칙, 형식, 정의를 적극적으로 교차시키면서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실천할 때, 현실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제도권 현실정치를 통해 집요하게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는 정치세력화 되어야 한다.

발표문

대학 성폭력·인권침해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을 둘러싼 쟁점들

유현미(서울대)

1. 들어가며: 대학 미투 운동이 던지는 질문

2018년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은 대학에서도 격렬히 진행되었다. 대학 미투 사건으로 보도된 대학의 수만 30곳 이상이고, 남성 교수(자)들이 대학과 학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다양한 가해 행위가 폭로되었다. 학생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연구실 벽을 2016년 강남역 추모행동에서 등장한 포스트잇의 물결로 뒤덮기도 했다. “더이상 당신을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과 “방 빼”라는 요구가 적힌 포스트잇은 연구실과 강의실이라는 대학의 방들을 지배해온 성별화된 질서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저항의 대중 행동을 표현했다.

대학 미투 사건들은 ‘대나무숲’ 같은 익명 온라인 공간이나 언론에 폭로된 이후, 대책위 같은 조력자 모임, 페미니즘 소모임, 총(여)학생회, 대학원생노동조합 같은 학생(자치)조직을 통해 대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응모임들은 서로의 사안에 연대하며 확장된 네트워크 형태로 문제제기를 해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 내 담당 기구와 제도의 한계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김태현, 2018; 위릿, 재정, 2019).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활발했던 대학 반성폭력 운동이 대학 내부에 공식화된 전담 기구와 사건 처리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했다면, 대학 미투 운동의 참여자들은 이것이 피해자와 학생을 위해 적절히 기능하지 못 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러한 목소리를 어떻게 해석해 제도와 정책 변화에 적절히 기입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2017년부터 소속 학과에서 진행된 ‘교수 갑질’·성희롱 사건의 대학원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다른 대학 사건과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 경험과 거기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학 미투 운동에 대한 자기 기술지(auto-ethnography)를 작성한 바 있다(유현미, 2018). 그럼으로써 조직 내 성별화된 고충이 사건화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대학 내 폭력문화와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19.3-12)>에 인턴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대학 사건의 여러 관계자들, 즉 피해자, 조력자 및 목격자, 대학 기구 담당자와 전문가를 30명 이상 인터뷰하는 과정에 함께 했다. 학생 뿐 아니라 다른 위치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학 내 사건 발생 구

조와 해결을 막는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대학은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주장, 실천이 발생하며 경합하는 공간으로 고유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평등권 침해와 조직의 예방·관리 책임을 개념화, 법제화한 ‘성희롱(sexual harassment)’ 사건이 최초로 문제화된 곳도 대학이다. 1993년 서울대 S교수 사건 이후, 성폭력을 강간 중심으로 사고하던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 섹슈얼리티 침해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성차별적 언행의 일상성이 가시화되었다(신상숙, 2007).

고등교육·연구 제도로써 대학은 다른 사회 영역과 구별되는 고유의 목적과 조직 구조, 문화, 경력의 경로를 가지며(Bloch, 2012), 단일 대학 내·외부를 가로지르는 연구소, 학회, 전공별 네트워크로 연결된 학계를 포괄한다. 대학은 다른 조직에 비해 더 높은 윤리적 기준과 책임을 지닐 것으로 기대 받으며, 비판적 사회의식과 학생운동의 배양처로 사회 일반을 선도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광장으로 상상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자율적 절차를 먼저 마련하고 실행한 곳도 학생회나 자치 모임 등 대학 학생 사회였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활발했던 반성폭력 학칙과 내규 제정 활동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2자적 문제를 넘은 ‘공동체적¹⁾ 해결’의 원칙이 표명됐고, 확장된 성폭력 개념의 적용, 실명 사과, 피해자중심주의 원칙,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가해자 분리, 대리인이나 대책위원회 모델이 대응 절차로 도입됐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 기구로 제도화되어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성평등센터, 인권센터의 규정과 운영²⁾에 반영되어 왔다(김보명, 2008; 장다혜, 2019; 홍성수, 2011, 2019).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학생운동의 쇠퇴,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화와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대학의 공동체적 성격이 변화했다. 또한 대학 기구로 공식화된 사건 대응 절차는 인사·징계처분과 연동되면서 피징계인·피신고인의 교원소청위원회 제소, 민사·행

1)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서 강조된 공동체적 성격이 이상화된 공동사회(Gemeinschaft)를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중립적으로 가정된 대학 내부의 성차별적 요소와 성적 차이를 가시화하며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면 누구나 소속되는 멤버십으로 학생 사회를 상정하고 공동선으로서 반성폭력 규범에 대한 공감, 의사소통적 문제 해결 방식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대안적 공동사회로서 대학에 대한 상상이 담론의 기반이었다고 생각한다.

2) 대학 내 공식화된 기구의 규정과 절차가 전국 대학에 마련된 행정적 계기는 1999년 제정된 (舊)남녀차별금지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성희롱 업무처리 지침의 하달이었다. 2001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남녀차별금지법령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을 각 대학에 시달해, “각 학교(기관) 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이 세부계획 안에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교육 자료의 게시, 상담자의 지정 또는 고충처리제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행정적 요구와 반성폭력 운동의 담론적 자원이 결합해 각 대학별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개념 규정과 이에 따른 대응 절차가 구체화되었다.

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에 대비하는 방식, 다시 말해 절차적 중립성과 사법적 객관성을 중시하는 운영으로 나아갔다(김엘림, 2016; 장다혜, 2019).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 사건’의 영향으로 강화된 피해자중심주의나 2차 가해 개념이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절차적으로만 수용되어, 사건 해결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지점에 대한 성찰도 제기되었다(엄혜진, 2009; 한국여성민우회, 2017). 이러한 상황은 대학 내 자율적 해결이나 공동체적 대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재질문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막히거나 교착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전술한 두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면접 자료, 관련 문서 자료들을 활용해 대학 미투 사건들이 문제화된 방식과 여기에서 확인되는 사건 처리 제도의 쟁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자유세션

전환기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사회: 정민승(한국방송통신대)

1_평생학습의 패러다임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페미니즘 학습을 향하여

발표: 김동진(여성주의 교육 연구소 페페(Feminist Pedagogy)/숙명여대)

2_의사결정 게임을 활용한 남학생의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연구

발표: 장혜원(육아정책연구소)

최윤희(송문중/이화여대)

토론: 배유경(서울대)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문

평생학습의 패러다임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페미니즘 학습을 향하여

김동진(여성주의 교육 연구소 페페(Feminist Pedagogy)/숙명여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누구나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의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페미니즘의 바람은 단지 바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고 있다. 한때 서점가에는 전례없이 페미니즘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위치성에 근거한 여성의 서사들이 책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 유통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페미니즘 강연이 증가했으며, 이 역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역풍으로 여성혐오에 기반한 반페미니즘 정서 역시 지속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나영, 2016; 엄혜진, 2019).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차별적인 현상태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실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책을 찾던 여성들은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또한 실천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페미니즘 교육인가, 페미니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배유경, 2018).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방향이란 어떠한 것이며 실천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탐색하기에 앞서 본고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지금의 교육을 바라보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자 한다.

발표문

의사결정 게임을 활용한 남학생의 과학 기술 분야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연구¹⁾

장혜원(육아정책연구소), 최윤희(송문중, 이화여대)

초 록

최근 한국사회는 젠더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가 부정적인 젠더 사회화 공간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지만, 남학생의 여성인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탐색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에 흥미가 높은 남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여성인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합의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 남녀평등 검사지를 활용하여 남학생의 교육과 직업분야의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과학기술 여성인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논의하는 의사결정게임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평등 검사지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은 2001년의 남자 대학생에 비해 교육 및 직업분야의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둘째, 의사결정 게임에서 32명의 남학생으로 구성된 여덟 모둠 중, 87.5%가 여성인력이 경험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남녀평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나, 12.5%가 남성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남성 우대 정책을 도출하였다. 연구논의로 남성우대정책을 도출한 모둠을 구성하는 남학생의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과 성장배경을 연결 지어 기술한다. 이 연구는 속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게임을 과학 수업에 적용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페미니스트의 교육적 전략을 모색한다.

키워드: 여성인력, 과학기술, 고정관념, 의사결정게임, 양성평등교육, 속의민주주의

1)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임.

I. 서론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차별은 최근까지도 관측되고 있다. 자연계열 여학생 입학비율은 51.1%이나 과학기술연구 개발인력 성별 신규채용 여성비율은 26.8%에 불과하였으며(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7), 여성공학자는 낮은 취업, 하위조직 및 비 핵심 업무 담당, 유리 천장 등 다양한 진로장벽을 경험하였다(오명숙, 2007). 성역할 사회화과정은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과 같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을 둔 가족문화로 인해 남학생은 낮은 수준의 남녀평등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남학생은 핵심 집단의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낮은 평등의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홍기원 외, 2001).

미래에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할 남학생의 성역할 인식은 과학기술 여성인력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 진로를 희망하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남녀평등 의식과 과학 기술 분야의 여성 인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탐색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 진로를 희망하는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은 어떠한가? 둘째, 과학기술 진로를 희망하는 남학생은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S중학교에서 과학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남학생 32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연령별로 13~15세이며, 희망 진로가 과학 기술 분야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남녀평등 검사지의 응답 결과를 문항별로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홍기원 외(2001)의 결과와 비교한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게임의 토론 활동을 모두 전사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한다. 연구자는 의사결정게임을 참관하면서 메모하였고, 활동 장면을 모두 녹음하였다. 분석 자료는 토론 내용 녹음 자료, 개인 및 그룹 활동지 자료이다.

가. 남녀평등 의식 검사

연구 참여자들에게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 의식 검사 중 교육생활과 직업생활에 대한 40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40문항으로 직업, 교육의 두 가지 영역 별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의사결정게임 방식

이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인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추하고 대안을 찾는 의사결정 게임을 적용하고 토론헌동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의사결정 게임(장혜원 2019a, 2019b)은 4라운드로 구성된다.

Ⅲ. 연구 결과

1. 남녀평등의식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남학생들의 교육 분야 평등 의식의 평균 점수는 2.88 이었으며, 직업 분야 평등 의식의 평균 점수는 3.42이었다. 이를 통해 직업분야가 교육 분야에 비해 더 동의하는 문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 분야 문항별 남녀평등 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동의함(5점)’이 넘는 문항은 4개였으며, 15개의 문항에 대해 보통 및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 남학생이 가장 동의하는 문항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타고난 지적인 능력 차이는 없다’와 ‘교사양성과정에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로 모두 남녀평등 의식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이며 이에 대한 평균값은 5.72점이었다. 반면, 남학생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은 ‘여자는 법학, 기계공학 등 전통적인 남성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로 남녀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었으며, 이에 대한 평균값은 1.66점이었다. 다음으로 직업분야의 남녀평등의식을 살펴보면, 직업 분야 문항 중 평균적으로 ‘동의함(5점)’이 넘는 문항은 5문항으로 전체 문항 중 25%를 차지하였으며, 75%에 해당하는 15 문항에 대해 ‘보통 및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가장 많은 남학생이 동의하는 문항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직원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로 평균 6.52점이었으며, 가장 많은 남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문항은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로 1.66점이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과거의 남학생에 비해 최근 남학생의 남녀평등 의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의 남학생은 남성 평등 보다는 남성 우위의 관점을 가진 반면, 2019년의 남학생은 남성 평등에 가까운 의식을 갖고 있었다.

2. 여성 과학 인력에 대한 고정관념

과학 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에 대해 남학생들은 ‘남성이 불평등을 받고 있다(1 모둠)’,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평등 하므로 양성 평등적 관점이 필요하다(5 모둠)’, ‘상대적 평등이 아닌 절대적 평등이 필요하다(2모둠)’으로 나타났다.

가. 남성의 불평등

남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모둠은 생물학적 차이, 자격과 기술, 임신, 육아 휴직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불평등한 구조 속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 모둠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이 과학 기술 분야의 직업과 기술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성이 이 분야에 대한 직업을 선호하지 않거나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이공계 진출에 대한 남성 중심적 사고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근거로 남성의 군대 문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징병제로 인해 남성이 받는 잠재적인 차별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나. 양성 평등적 구조로의 변화를 모색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평등 하므로 양성 평등적 관점이 필요하고 인식하는 경우, 이 공계 여성이 보육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교육 및 임금의 차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취업 및 고용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져야 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려서 여성의 경제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수반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통해 성 평등하게 채용하고 고용하는 시스템 도입, 근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휴식과 의무의 시간을 재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의무적으로 여성의 고용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일정한 비율을 고정적으로 채용하며,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절대적 평등 추구

상대적 평등이 아닌 절대적 평등의 관점의 변화를 주장한 모둠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갖고 있는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직업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STEM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가져야 할 직업적 편견의 변화가 필요하며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 조건이 좋거나 나쁜 회사 또는 여성을 선호한 직종의 비율을 조사하여 남성의 불평등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학 기술 분야의 여성 인력에 대한 중학교 남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인식을 탐색해 보고 이를 통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양성 평등적 관점 제시를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과학기술 진로를 희망하는 남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남녀 평등적 의식을 갖고 있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설문 결과와 달리 의사결정게임을 활용한 결과, 남학생들은 남성 우대 정책안을 도출하거나 여성이 남학생에 비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편견을 보였다. 의사결정 게임을 활용하여 남학생의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식을 탐색한 결과, 중학교 남학생들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불평등한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 연구는 남녀평등이 정착된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과학 교육 내에서 과학 기술 여성 인력에 대한 남학생의 인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단순히 양성 평등에 대한 정보와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 인지 부조화 상황에 노출하고, 이를 직면하는 경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들은 여성들의 과학 기술 분야로의 진출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경험과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인지 부조화’를 느끼고 있었다. 설문지 응답에서는 남녀평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자신의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남성 중심적 대안 및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절대적 평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과학기술계의 엘리트 남성의 남성 중심적 의사결정 행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참여한 32명의 학생 중 남성 우대 주장을 강력하게 제시한 학생들은 과학 영재이다.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 자리 잡고 있는 남성적 속성의 문화와 엘리트주의가 결합될 때, 남녀평등 문화가 정착된 과학기술 생태계는 요원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 안에서 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평등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교수학습이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오명숙. (2007). 여학생 공학교육의 장벽 및 프로그램 개발.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25(3), 250-255.
- 장혜원. (2019a). Drawing Consensus Using a Card Game: Working in STEM (카드를 활용한 토론 놀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기' 주제를 중심으로). 2019 한국과학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 장혜원. (2019b). 의사결정(PlayDecide)게임에 대한 탐색 연구: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출판예정).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7). 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 홍기원, 전방지, 차경호. (2001). 남녀의 평등의식,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73-187.

자유세션

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회: 이은아(이화여대)

1_여성들의 경험에 나타난 육아휴직의 다면성

발표: 황정미(서울대)

2_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사례 분석: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3_남성돌봄의 주변화와 역할 전이: 남성육아휴직자 사례분석

발표: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토론: 김수정(동아대)

이순미(전남여성가족재단)

발표문

육아휴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¹⁾

- 여성들의 경험에 나타난 육아휴직의 다면성

황정미(서울대)

1. 들어가며

한국의 육아휴직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될 때 도입된 후 2001년 육아휴직 수당 제도화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어느덧 도입 20주년을 눈앞에 둔 육아휴직은 부러움의 대상, ‘상징적인 선진국 정책’을 넘어서서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현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²⁾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육아휴직 기간, 수당, 자녀 연령 등의 기준이 점차 확대되었고, 특히 남성의 휴직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등, 완만하긴 하지만 일관되고 누적적인 확장이 지속되었다. 선거 때에는 육아휴직 확대를 모든 정당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며, 특히 저출산 대응책 차원에서도 취업 경력과 자녀 양육을 함께 지속가능하게 하는(이른바 일-가족 양립) 휴직 제도의 확대는 의심할 바 없는 정책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그러나 더 많이 더 길게 주는 것, 즉 ‘다다익선’이 곧 해결책이라는 식의 일면적 관점으로는 육아휴직을 둘러싼 현실적 쟁점들을 포착하지 못한다. 육아휴직의 사회적 효과는 휴직 사용자 증가와 예산 확대라는 외형적 분석만으로 충분히 포착될 수 없으며, 정책 수요자(수혜자)인 일하는 부모들이 직면하는 포함과 배제(inclusion/disinclusion), 유인과 불이익(incentive/disincentive)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제도의 확대 뿐 아니라 실제 휴직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직장과 가족을 연결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육아 휴직을 꺼리는 직장의 관행과 조직문화, 장래의 직업 경력전망과 자녀 돌봄의 필요, 휴직으로

1) 이 글은 서울대 여성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육아휴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 고용유지와 젠더효과를 중심으로” - 2017년 학봉상 연구지원, 연구책임자 양현아 교수)에 필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심층면접은 필자를 포함한 공동연구자들이 함께 수행하였다.

2)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3,763명이었던 육아휴직자는 2017년 90,123명으로 늘었다. 육아휴직 지원금액도 2002년 30억 8,700만원에서 2017년 6,804억 3천만원으로 급증하였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50)

4)

인한 급여의 감소, 유급 노동과 무급 돌봄의 성별 분업 등을 놓고 많은 부모들은 현실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육아휴직 활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휴직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법률상 육아휴직은 성별과 무관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른바 ‘직장맘’, ‘맞벌이 엄마’들을 위한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육아휴직은 휴가 기간, 수당 수준에 따라 그 젠더 효과가 달라지는 제도적 양가성(ambivalence)을 갖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육아 휴직은 돌봄 결핍(care deficit)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사다리(steping stone)’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후의 경력 축적 및 고용 지속을 포기하게 만드는 ‘함정(trap)’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긴 휴가기간이 낮은 휴직 수당과 결핍될 경우 ‘마미 트랙(mommy track)’, 즉 일하는 어머니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갈아타거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³⁾

이 연구에서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육아휴직만으로 돌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현실적 딜레마의 상황들을 질적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9명의 여성들을 만나서 이들이 휴직을 결정하게 된 상황, 휴직 기간 동안의 돌봄 분담과 가족관계, 휴직 후 직장 복귀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자 하였다.

심층면접 연구 참여자는 육아휴직 경험자 지인을 통한 눈덩이 표집(snow-balling)으로 모두 9명을 만났으며, 2018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 경기, 대전, 춘천 등 연구 참여자의 사무실 또는 집 근처의 카페 등에서 만나 면접을 실시하였다.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접 내용을 녹취한 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9명 중 (면접 시점 기준) 30대가 6명, 40대가 3명이며, 자녀가 하나인 참여자는 2명이고 그 외 7명은 자녀가 둘이었다. 현재 휴직 중인 사람은 2명, 휴직 후 퇴사한 사람은 2명이었고, 5명은 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취업자 4명, 민간 기업 취업자는 5명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면접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3명, 기술직 1명, 연구직 2명, 전문직(변호사/약사 등) 3명 등이다.

3) 고용보험 DB (2002~2015)에 대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 근로자에게서 높으나, 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소득이 높을수록 휴직 후 직장 유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급여가 낮은 계층은 휴직 사용률은 높지만 기간이 길수록 고용유지율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한나 · 윤정혜 · 최숙희, 2016,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68쪽.

4) 반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되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개방적 면접을 가미하였다. 주요 질문은 첫째, 일하는 여성들이 휴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 둘째, 출산 및 육아를 둘러싼 역할 분담과 가족관계, 셋째, 복직 후 다시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고충 등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육아휴직 사용 경험자를 수소문 하다 보니 주로 고학력의 안정적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따라서 육아휴직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노동시장 주변부 여성들의 경험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으로 보이는 고학력 여성들 사례 안에서도 육아휴직 전후에 직면하는 상황과 고충, 의사결정의 맥락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사례 분석: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중심으로¹⁾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서론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부모 모두 각각 1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높아졌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휴직 후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는 때에는 형사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체감도는 다르다. 근로자들에게 직장에서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54.2%만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고, 5~9인 규모의 사업체 근로자는 15.8%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²⁾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더라도 신청하기 부담스럽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³⁾ 육아휴직 이용으로 인한 차별, 해고나 불리한 처우 등의 경험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지만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 해고, 불리한 처우를 겪을 경우, 근로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는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불이익의 시정 또는 손해배상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의 판정례, 결정례, 판례 등에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이 우려되면 육아휴직 신청을 아예 포기하거나 ‘자발

1) 이 발표문은 양현아·권현지·김정혜·전윤정·황정미(2018), 「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용유지와 젠더효과를 중심으로」 중 필자 집필 부분을 발췌, 수정한 글입니다.

2) 김영옥·김종숙·이선행(2017),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59쪽.

3) 김영옥 외(2017), 위의 글, 68쪽.

적'으로 퇴사하는 선택을 하고,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을 준 회사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 신청까지 도달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문제가 드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분쟁 해결 절차에서 관련 사례가 적은 현실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문제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례를 분석하였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분쟁 사례로서, 차별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례,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 판례 등은 건수가 매우 적다. 그에 비하여 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진정례나 판례에 비하여 건수가 좀 더 많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며 해고 또는 재계약 거절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 중에서 육아휴직 관련 쟁점이 문제된 사례 전체의 원문을 수집, 분석하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구제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노동위원회의 판단 경향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수집된 판정례의 판정 일자 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사건 수로는 총 42건이다. 육아휴직이 쟁점이 된 사례들이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모두 포함된다.

발표문

남성돌봄의 주변화와 성역할전이 - 남성육아휴직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¹⁾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들어가며

이 연구는 남성육아휴직자의 심층면접 사례분석으로 현재 남성육아휴직자 돌봄의 주변화와 역할전이 현상을 분석하고 남성육아휴직제도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으며 2001년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제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육아휴직제도는 임금노동자의 자녀 양육 지원, 고용에서의 성평등 제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 받아 왔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장지연, 2004; 박기남, 2009; 홍승아, 2010, 송다영 외, 2010) 특히, 남성의 참여가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젠더편향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에서 남성의 참여율이 낮은 것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급여 대체율로 인해 양육과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부분은 여성근로자로 젠더편향성을 나타내고 있다²⁾. 즉, 남성의 경우 아빠의 달로 인센티브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전체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는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로 육아기의 자녀양육비 수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남성들의 휴직 사용을 차단하는 주요 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급여 수준은 사실상 맞벌이 부부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통적 성별분업관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들이 직면하는 노동생애와 가족생활에서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전통적 성별분업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

1) 이 연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보상위원회 보고서 「육아휴직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 고용유지와 젠더효과를 중심으로」(미간행) 남성육아휴직 사례부분을 바탕으로 대폭, 수정, 보완된 내용이다.

2) 고용보험 DB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살펴보면, 2002년 여성 3685명, 남성 78명으로부터 2018년 남성 휴직자 17,662명 여성 휴직자 81,543 명으로 비약적인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남성은 2017년 처음으로 이용자가 10,000명을 넘었으며(12,043명) 2018년에도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을 받고 있다.

둘째, 육아휴직은 제도 설계의 특성과 실제적인 접근성, 다른 사회정책과의 연관성 등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육아휴직은 흔히 여성의 양육역할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친여성적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상황에서는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보다 어머니 역할을 우선적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전운정, 2017; 김엘림, 2004). 오래된 성별 분업관에 기초한 육아휴직제도의 설계가 그 내면에는 성차별성이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착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우기 휴직 이후 공적, 사적 보육과의 연계에서도 육아휴직제도가 나타내는 젠더효과는 사후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최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서구국가에서는 육아휴직(부모휴가)의 기간 연장보다는 휴가 후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며, 아동양육 차원에서 육아휴직은 공보육을 보완하는 역할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공보육과 육아휴직 제도를 적절하게 연계함으로써 일-가정 양립과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을(OECD, 2012)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사회적 효과는 휴직 사용자 증가와 예산 확대라는 외형적 분석만으로 충분히 포착될 수 없으며, 정책 수요자(수혜자)인 일하는 부모들이 직면하는 포함과 배제(inclusion/disinclusion), 유인과 불이익(incentive/disincentive)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육아 휴직을 꺼리는 직장의 관행과 조직문화, 장래의 직업 경력전망과 자녀 돌봄의 필요, 휴직으로 인한 급여의 감소, 유급 노동과 무급 돌봄의 성별 분업 등을 놓고 많은 부모들은 현실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포함과 배제/유인과 불이익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육아휴직 사용과 이후의 효과를 정책 수요자인 남성 부모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살펴봄으로써 육아휴직의 성평등한 제도 발달 및 정착, 사회적-젠더적 효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을 통해 육아휴직제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있어서 이 제도가 하나의 중요 연결고리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